

민영화  
정부의 꿈수와 노림수

▶ 2, 16면

한미동맹 60년  
침략과 파괴의 역사

▶ 7면

교육  
전교조 탄압과  
교육 위기에 맞서

▶ 5면

진보의 진로 논쟁  
협동조합이  
대안일까

▶ 10면

통상임금 논란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넘어

▶ 8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민식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6499-279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2

Left21.com

제105호 | 2013년 5월 27일 ~ 6월 9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레프트21

연이은 악재와 비리  
번지는 불만과 저항

# 헤매는 박근혜 지금 싸울 기회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힘과 추진력이 가장 강하다는 임기 초부터 계속 털려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기세를 몰아 국정的主导권을 잡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걸어다니는 4대악' 운창중이 추악한 사고를 저지르며 그런 구상은 물거품이 된 바 있다.

최근 극우 '일베충'과 종편 들이 5·18 광주항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능멸한 것도 반우파 정서를 증폭시켰다. 또, 조세도파처에 한국의 유명 기업주들이 검은 돈을 빼돌려 역외탈세를 해 온 것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얹힌 데 얹힌 격으로 계속되는 악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박근혜 정부의 기반과 관련 있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 속에서 강성 우파 정부로 자리매김하려고 임기 초부터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 정신 상태를 가진 낡고 부패한 인물들이 이 정부와 기득권 체제의 주요 요직에 자리잡거나 주도권을 쥐게 됐다.

또한 박근혜의 행태가 이런 질 낮은 인물들이 자신감을 갖고 날뛰게 해 줬다. 성상납 의혹이 파다한 김학의를 법무차관에 임명한 것도,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 부르며 역사 왜곡에 불을 지핀 것도, 전두환에게 6억 원을 받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도 박근혜 자신이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지금 벌어지는 문제들을 앞장서 고무한 것이다. 결국 악재들을 만들어 내는 숙주는 박근혜 정부의 기반과 성격이다.

▶ 3면으로 이어짐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누구의 말일까요?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을 제가 언제 또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제2의 윤창중을 걱정하는 박근혜

“여러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소중한 제보에 보답하고자 국정원 초청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일베’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국정원하면 CIA나 아이리스 이런 게 떠오르지 않고 일베충이 먼저 떠오른다.”

〈한겨레〉하재현 기자의 촌철살인

“제가 미국의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문화적 추행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윤창중의 변명

“윤창중 대변인뿐 아니라 … 청와대 관계자들의 온갖 추태들을 봤다. 다들 진상을 너무 부리더라.”

CBS와 인터뷰한 박근혜 방미 관계자

“전장에서 흥분 상태에 있는 군인들에게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입에 걸레를 문 일본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루

“정몽구 회장이 안스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녹을 받아먹고 있는 현대차 노조원들은 더욱 인간 쓰레기 같지만”

〈한국공업신문〉에 실린 쓰레기 칼럼

“[나는] 노래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즐겨 부른다.”

〈중앙일보〉논설위원 김진, 국내 노래방 기계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없다

“의문이 있으면 갑의 해석에 따른다.”  
농심의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서 문구

“[밀양 주민들은] 천주교, 반핵단체 그 사람들에게 세뇌당한 것”

사람들을 세뇌시키려는 ‘핵미피아’  
한전 부사장 변준연, 이렇다 잘랐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 거짓말도, 폭력도, 핵발전도 중단하라!

“한이 땀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까.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니 한이 땀힙니다.”

5월 20일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에 저항하다 실신한 이금자 할머니가 지난해 법원에 낸 탄원서 일부다.

이날 아침,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경찰은 군사작전처럼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

이금자 할머니 등 주민들은 분노와 절망에 차 막아섰다.

마을 입구 나무에 목을 땔 밧줄을 걸어 놓고는 옷통을 벗고 오물을 뿌리며 저항했다. 대형 전기톱 앞에서 나무를 감싸며 싸웠다. ‘내가 죽으면 시신을 청와대로 옮겨 달라’는 유서를 써 놓고 말이다.

수십 년을 산 터전을 지키려고, 야만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자존을 지키려고, 그렇게 70~80세가 넘는 할머니들이 몸을 던졌고 병원에 실려 갔다.

경찰과 한전 직원들은 이런 할머니들을 밀어 쓰러뜨리고 밟고 때렸다.

“햇불을 밝히며 야간 공사를 해서라도” 송전탑을 건설하겠다는 한전 사장의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폭력과 모욕은 끝이 없었다. 지난해 1월엔 고(故) 이치우 할아버지가 폭력에 항거해 스스로 목을 붙살랐다.

쓰러진 할머니에게 ‘불 질러 버리겠다’고 조롱하고, 맞아서 입원한 여스님에게 “네 년을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끔찍한 야만과 폭력의 배후에는 핵발전소를 늘리려는 한국 지배자들의 야욕이 자리잡고 있다. 이 시커먼 속을 감추려고 정부와 한전은 거짓말을 일삼았다.

2009년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신고리 핵발전소 1~6호기의 전력을 영남 지역에 공급하려고 이 송전선로를 만드는 거라고 했다.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 쪽이 ‘과잉 공급’이라고 비판하자, 이 송전선로로 중부권에도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은 바로 경남 고리에 새로 짓는 핵발전소들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진현은 “UAE 원전 수주하면서 같은 모델인 신고리 3호기 운영 모습을 UAE 측에 보여



주요이전

“시신은 청와대로” 주민들의 목숨 건 저항. 핵발전 증설을 포기하는 것이 해답이다.

주기로 한 상황”이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핵무장’까지 꿈꾸는 한국 지배자들에겐 잠재적으로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핵발전소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전력 대란”을 공사 강행 명분으로 대는 건 역겨운 거짓말이고, 책임을 주민들에 전가하려는 술수일 뿐이다.

지금 당장 송전탑 공사를 시작해도 내년 1월 말에나 완공된다. 올 겨울 전력과

는 상관 없는 것이다.

신고리 3호 핵발전소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할 비율도 1.7퍼센트밖에 안 된다.

한편, 이 송전탑은 무려 76만 5천 볼트나 되는 초고압 선로로 엄청난 전자기파를 내뿜는다.

전력 대란

초고압 전선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어린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검증

된 사실이다. 알츠하이머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엄청난 고압 탓에 전선이 지나는 곳에선 24시간 기계음이 나온다.

한마디로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게다가 송전탑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은 박정희가 만든 악법이다.

한전이 지도 위에 선을 긋고 송전탑을 짓기로 하면, 반대가 원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이 밀양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밀양 송전탑 강행과 반대 투쟁 이야말로 결정적 진실을 보여 준다.

핵발전이 인류에 재앙적인 존재기 때문에 그 건설 과정도 거짓과 폭력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는 진실 말이다.

신고리 핵발전소 증설을 포기하는 것이 밀양 송전탑 문제의 해결책이다.

더 나아가 이런 폭력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증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 지역마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력 부족도 막을 수 있고 생명을 짓누르는 초고압 송전탑 따위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해결책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새누리당 안에서 공사 일시 중단 목소리가 나오는 건 저항이 워낙 강렬해서다.

정부도 ‘지원방’을 만들어 보상을 충분히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 송전탑은 끝내 짓겠다는 뜻이다. 보상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다.

이런 탄압과 꼼수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송전탑 건설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녹색당, 나눔문화 등 여러 단체들도 탈핵희망버스 등을 조직하며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노조 집행부가 사측의 만행에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력 관련 노조 활동가들은 정부의 핵발전 야욕과 폭력에 반대하며 주민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거짓과 폭력이 생명과 자연을 짓밟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

김문성

##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가스 민영화 논리

박근혜 정부가 사기업들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더 많이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에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보수언론도 응원부대로 나섰다. 사기업이 가스공사보다 LNG를 더 싸게 구입한다며 가스 민영화로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6~09년에 일본보다 6~30퍼센트 비싸게 LNG를 수입해 9조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며 가스공사를 비난했다. 대기업 수십 곳이 경쟁하는 일본이 모범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짓말과 달리, 최근 가스공사가 높은 가격에 LNG를 들여온 것은 오히려 민영화 추진의 결과다.

2000년대 초 약 5년 동안 국제 가스 가격은 이례적으로 낮았다. 그런데 당시에 정부는 천연가스 장기 도입 계약(보통 20년)을 맺으려는 가스공사의 시도를 막았다.

가스공사 분할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까 봐 장기 계약보다 비싼 중·단기 계약만 허용했다. 반면 SK와 포스코 같은 사기업은 더 싸게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일본보다 비싸게 LNG를 들여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알려진 것이다. 이종훈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의 지적처럼 “2006년 국정감사에서 민영화 정책 실패로 지적된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 가스 민영화의 폐해를 추진 근거로 바꿔 버린 것이다.

경쟁 도입이 천연가스 수입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SK가 싼값에 LNG 수입 계약을 맺은 2004년에 가스공사는 SK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 계약을 한 바 있고, 2010~12년에는 일본 대기업들보다 더 싸게 계약을 맺었다.

구입하려는 쪽이 경쟁을 하면 가격은

오른다는 상식에 비춰 보더라도, 정부의 논리는 황당한 것이다.

최근 SK와 GS 같은 대기업들이 LNG 직수입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가스 민영화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대규모로 개발돼 LNG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SK와 GS

가스 직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GS는, 2006년에는 국제 LNG 가격이 오르자 직도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제 LNG 가격이 떨어질 듯하자, GS 같은 재벌들은 뻔뻔하게 가스공사의 LNG 가격이 비싸다고 비난하며 직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싼 가격에 LNG를 수입하면 기업들은 수익을 높일 수 있을 테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치솟는 가스 요금에

고통받을 것이다.

한 가스노조 조합원은 “이미 민영화한 석유 산업에서도 S-Oil이나 GS 같은 대기업들끼리 담합해서 가격 올리고 있잖아요. 가스도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가스 민영화는 비정규직도 늘릴 것이다. 다른 조합원은 “지금 가스공사에는 비정규직이 많지 않고, 있어도 무기계약직이죠. 몇 년 전에 소방 업무를 아웃소싱했는데, 민영화하면 이런 아웃소싱이나 비정규직이 막 늘어나겠죠”라며 우려했다.

따라서 가스공사 노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정부의 거짓을 폭로하고, 민영화의 폐해를 알려 내며 반대 운동 건설에 나서야 한다.

철도노조가 KTX 민영화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는 이때, 가스공사 노조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면, 2002년 철도·가스·발전 파업이 민영화를 막아 낸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

강동훈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 가판은 6월 10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대편(오아시스빌딩)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경문 건대편 14:30~15:30

격주 화요일 (다음 가판은 6월 11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부산 서면 주디스테화백화점 앞 18:30~19:30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19:00~20:00

격주 수요일 (다음 가판은 6월 12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격주 목요일 (다음 가판은 6월 13일)

울산 상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수방서 옆 19:00~20:00

대학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6월 10일~12일)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층 입구 앞 월요일 11:20~12:20 (이화여대는 매주 공개판매를 진행합니다)

인천대 학생식당 입구 화요일 12:00~13:00  
국민대 법학관 1층 식당 앞 화요일 12:00~13:00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앞 화요일 11:30~12:30  
부산대(부산) 정문 앞 화요일 11:50~12:50  
고려대(안양) 정경대 후문 화요일 16:30~17:30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수요일 11:45~12:45  
충남대 공대2호관 앞(쪽문) 수요일 11:45~12:45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곡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 박근혜에게 쫓 필요 없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

## ▶ 1면에서 이어짐

여기에 더해 박근혜의 위기를 부채질하는 객관적 상황도 여전하다.

계속되는 성장을 하락이 보여 주듯이 한국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긴장이 풀리지 않는 대외 환경의 위기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내세운 '경제 민주화'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박근혜가 '재벌 파주기'와 대북 강경 모드로 방향을 틀며 '막튀'와 말 바꾸기를 거듭한 것은 이 때문이다.

거듭되는 위기에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이 넓어지지 않으면서 추진력도 자연히 약해지고 있다. 임기 초 지지율 상승 효과는커녕 당선 지지율 51퍼센트에서 정체·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6인 협의체'를 만들어 '여야가 공감하는 법안들은 빨리빨리 처리하자'던 계획은 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아예 배제한 채, 우클릭한 민주당과 논의하는 데도 속도가 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갑의 횡포'에 대한 전 사회적 분노가 들끓으면서 '재벌 파주기'로 행동을 꺾던 새누리당의 발목이 잡히기 시작했다. 고용률 70퍼센트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지만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 지도부도 통상임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아마 박근혜는 꼬리 자르기와 정점 돌리기를 하려 들 것이다. 윤창중 문제는 홍보 수석 이남기 사퇴로 마무리하려 한다. 또,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명박 '절친' 천신일과의 편법 거래가 드러난 CJ그룹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러나 이런 공격의 끝갈이 결국 박근혜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 당장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그렇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악성 댓글 달기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바로 박근혜다. 사실 대통령 자리도 그 덕에 얻은 셈이다.



밀면 밀리는 박근혜. 택배 노동자 파업과 승리는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를 이용해 강력하게 투쟁할 필요를 보여 줬다. 5월 13일 여의도에 모여 투쟁을 선포하는 택배 노동자들.

이명박 정권의 문제는 새누리당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곧 박근혜와도 이어질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비리의 몸통이라는 점이 박근혜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또한 이런 시도는 우파의 갈등과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우파들은 경제 위기 시기에 강성 우파 정부가 필요해 유례없이 결집했다. 그런데 만일 우파가 분열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더욱 흔들릴 것이다.

## 자신감

무엇보다 박근혜의 위기는 노동자들이 싸워 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쌍용차 투쟁, 학교비정규직 투쟁 등이 분출했으나 박근혜 당선으로 잠시 주춤거리기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찬물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광고할 줄 알았던 박근혜가 잇따른 위기로 비틀거리자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서서히 살아나며 여기저기서 투쟁이 분출하고 있다.

케이블방송,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새로 노조가 건설되면서 노동운동의 저변이 넓어지는 것도 고무적이다.

이런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힘이 확인되고 있다. '을들의 반란'을 상징한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은 16일 만에 CJ를 무릎 꿇렸다. 대구경북 건설노조도 비조합원, 이주노동자 등과 단결을 꾀하며 사흘 만에 통과하게 승리를 거뒀다.

조중동이 거품 물고 비난한 현대차 노조의 특근 거부 투쟁은 사측의 생산 차질액이 1조 6천억 원을 넘어서며 막강한 파괴력을 선보였다.

진보진영은 지금 터져 나오는 노동자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투쟁을 서로 연결해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더 커다란 투쟁으로 발전시키려 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비틀거리는 박근혜 정부에 결정적인 방을 날릴 힘이 있다.

그런 점에서 노화한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노동자들도 서로 고통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조직된 노동자들은 그나마 살 만한 사람들이다" 하고 주장한 것은 안타깝다.

오히려 진보진영은 노동자 투쟁의 힘을 강화하며 올바른 진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경화하는 민주당 같은 세력에 무비판적으로 기대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노동자들

도 임금 삭감과 인원 감축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투쟁에 혼란을 줬다.

박근혜 정부가 진보진영 일부를 희생양 삼으며 위기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예컨대 철도 민영화를 앞두고 '한길자주노동자회' 소속 철도노조 조합원들 집을 압수수색한 의도는 뻔한 것이다. 이같은 마녀사냥으로 진보진영은 위축·분열시키고, 우파는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단결된 투쟁으로 박근혜의 위기를 파고드는 가운데 진보진영의 위기와 분열을 해결할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김지운

앞시습 2013에서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저항의 미래'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8면에.

##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박근혜 정부가 철도·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관련 기사 2·16면

지배자들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 많이 쓰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효율성"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효율성이다. 그래서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요금 폭등을 낀다. 또한 비용 삭감을 이유로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악화해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안전 설비 투자를 줄여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

2002년 한국통신이 민영화돼 KT로 이름을 바꾸고 LG텔레콤과 SK텔레콤이 통신 부문에 진출하며 "경쟁 체제"가 구축됐지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되레 늘었다.

한국통신을 민영화하기 전에는 무료였던 114 등의 서비스는 유료화됐다.

KT는 해마다 수익을 엄청나게 챙겼지만 매출 대비 설비 투자액은 해마다 줄었고 수익의 절반을 주주 배당금으로 썼다. 민영화 전 6만 5천 명 이상이던 정규직 노

동자 수는 3만 7천 명으로 반토막 났다.

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민영화도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민영화 2년 만에 수도요금에 6급제로 뛰어 1천만 명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 사람들은 더러운 개울물을 마셔야 했고, 결국 12만 명이 콜레라에 감염돼 3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0년대 초 철도를 민영화한 영국에서는 탈선 사고와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그런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광재는 "코레일의 독점 운영으로 누적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철도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영국 철도 민영화의 상징이던 레일트랙이 "누적 적자"로 결국 파산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 착한 적자

게다가 전기, 가스, 철도, 교육, 의료처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서 나는 적자는 '착한' 적자고 꼭 필요한 적자다. 그만큼 대중의 생명과 안전과 안락한 생활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저들이 대다수 노동자·민중에 재앙일 뿐인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 위기와 관련 있다. 공기업을 팔면 정부로서는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사기업으로서는 새로운 돈벌이 원천을 얻을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필요도 있다. "철밥통" 운운하며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 부문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고, 이런 속죄양 삼기로 시장과 경쟁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퍼뜨릴 수 있다.

이처럼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 사기업 배를 불러 주는 것이 민영화의 본질이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과 생계에 직결되는 곳에서도 수익을 뺏아먹으려는 저들의 탐욕을 저지해야 한다.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은 38일 동안 공동으로 파업을 벌여 김대중 정권의 민영화를 막아 냈다. 당시 투쟁은 약점도 있었지만 정권을 위기에 빠뜨리고 지배자들을 자중지란에 빠뜨렸다. 2008년 촛불항쟁도 이명박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아래로부터 투쟁이 강력하게 건설된다면 점점 깊어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필사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저지할 수 있다.

6월 1일 민영화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결의대회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차승일

앞시습 2013에서 '민영화와 대안 논의'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8면에.





김애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인터뷰

#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면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김애연

이 생생한 인터뷰는 학교비정규직 투쟁이 왜 정당하고 우리가 이 투쟁에 왜 연대해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

저는 중학교에서 조리원으로 5년 넘게 일했어요. 조리원은 학교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참 어려운 직종입니다. 우리 학교만 해도 조리원 12명이 학생과 교직원 1천6백78명의 급식을 담당해요. 조리 도구는 대부분 식어서 무겁습니다. 배식차를 5층까지 끌고 가 층층마다 배식하고 일일이 수거해야 합니다.

## 계란 껍질 4천 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허리가 잘 펴지지도 않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기 일쑤예요. 세척에 사용하는 약물 때문에 위험한 순간도 많아요. 저도 약물이 눈에 들어 각막이 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김애연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1만 5천여 명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이들이 6월 22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런데 병가도 낼 수 없고 치료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해요. 산재 신청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2월만 되면 마음을 줄이며 혹시 내가 해고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거든요.

계란 껍질 4천 개를 까라는 지시에 말 한마디 못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학교의 다른 노동자들은 4시 30분이면 퇴근하지만, 우리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면서도 초과근무 수당 한 번 받지 못했어요.

교장은 우리가 학교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꼬박꼬박 인사하는데 아는 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령이었어요.

그러나 노조를 만들며 저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과근무 관행도 문제를 제기해 우리도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퇴근하게 됐고요.

교장 앞에서, 행정실장 앞에서 말을 하게 됐어요. 저는 투쟁을 통해 변했어요. 남 앞에서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던 제가 이제는 옆 학교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노조 가입도 받아요.

호봉제를 도입하자는 우리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살이 넘으면 자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일한 분들이 갓 들어온 사람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일이 생겨요.

오래 일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호봉제가 필요합니다. 위험수당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6월 22일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고 있어요. 정부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도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대하길 바랍니다.

지난해 파업 때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 주고, 학생들에게 왜 학교비정규직이 파업을 하는지 유인물을 돌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이 소식은 경기도 전체에 퍼져서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지금도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에 가입해라! 노조에 가입하면 오히려 해고 위협에서 우리를 더 잘 지킬 수 있다.”

올해도 해고가 많았는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겁나서, 또는 잘 몰라서 그냥 쫓겨났지만 노조에 가입한 분들은 일자리를 지킨 경우가 많았어요.

올해 싸우지 않으면 박근혜 5년 동안 끌려 다닐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기필코 호봉제를 쟁취하고, ‘비’자 빼고 당당하게 정규직으로 살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조명지

고선경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영전강분과장 인터뷰

#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교사의 양심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3년에 걸쳐 6천5백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뽑아 학교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에 한 학교에서 4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해 놔서요. 그래서 올해 8월이 되면 2009년에 들어왔던 5백 30여 명의 선생님들이 해고될 상황이죠.

우리는 교사로 대우받지도 못하면서 비정규직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기간제법 적용 예외 대상이라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죠.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진보교육감이 있는 곳



고선경

에서는 직접고용이 시행되고 있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제외됐어요.

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다 보니 성추행부터 온갖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적소리를 못합니다.

일상적인 차별도 심해요. 정규직 교사와 명찰 모양도 다르고 우리는 선생님이 아닌 강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2009년 초중등영어회화전문강사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나아가 봉제로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면서 단결도 높아지고 연대도 넓어져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노조에 가입하면서 원칙을 세

웠어요. 교원단체들과 연대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정규직 교사들의 냉대와 차별을 느낄 때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때문에 우리를 방어하는 것을 꺼려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비대화된 영어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 난 집에 집은 태워도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 제도로 들어와 그동안 공교육에 헌신한 사람들을 잘라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라면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면 투쟁의 파고를 높여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받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교사로서 양심이자 도리입니다.

인터뷰·정리 조명지

# 학교비정규직의 힘은 단결할 때 더 막강해진다

차별과 설움을 뚫고 일어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5월 21일 울산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통과됐다. 통과하게도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에 첫 양보를 따낸 것이다. 이어 11개 지역의 보수교육감들은 일제히 학교비정규직 노조들과 교섭을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성과다. 지금 고무된 노동자들은 “이제 직고용은 대세”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새누리당이 발의한 학교비정규

직 관련 법안에도 이 점이 명시됐다.

그룹에도 노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는 6월 22일 대규모 집회와 7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감 직고용을 확실히 굳히고, 호봉제 도입과 교육공무직 전환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각급 교육청과 시작된 교섭에서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따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호봉제 도입과 교육공무직 전환

은 노조들이 내세운 핵심 요구다. 이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지만,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쟁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요구를 쟁취하려면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공공의 적

지난해 ‘급식 마비’로 지배자들을 놀래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더 큰 규모로 조직화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5만여 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이 노동자들이 함께 똘똘 뭉쳐

강력한 파업으로 맞선다면, 두려울 게 없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본격적인 투쟁을 앞두고 양대 학교비정규직 노조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장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6월 1일 집회가 노조별로 따로 열리게 된 것도 아쉽다.

6월 22일 총력결의대회로 가는 길에 더 크게 단결해 함께 모이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더 효과적일 텐데 말이다.

‘단결 투쟁’은 우리 편의 사기와 힘을

복돋을 진정한 힘이다. 이번 투쟁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해 다시금 저력을 보여 줘야 한다.

이런 단결 투쟁을 경험하며 장차 하나의 노조로 나아갈 수 있다면, 막강한 대오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하기로는 이런 노동자들이 같은 학교에서 공동의 적에 맞서고 있는 정규직 교사들과도 단결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 교사들이 기층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해야 한다.

박설





협력·평등을 중시하는 학교를 위해 싸워 온 전교조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이런 저항을 약화시키려 한다. 5월 14일 '교육 위기 극복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

전교조

# 커지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목소리

박근혜 정부는 취임 전부터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고 협박하며 학교와 교육을 망칠 '갑'의 위세를 부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취약성을 드러냈고, 근래에는 노동자들의 저항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는 정부의 공격이 주춤해졌다.

그래서 전교조 조합원과 활동가들의 자신감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조합의 자주성과 투쟁력을 지켜야 한다는 정서도 커지고 있다.

나를 포함해 대의원 9명이 발의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교사 선언' 서명도 확대되고 있다. 5월 23일 현재 3백22명이 서명했다.

조합의 주요 간부들도 이 선언에 서명했다.

특히, 최근에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서명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현 전교조 지도부부를 배출한 현장조직도 규약·'시정' 명령 거부를 내건 것이다.

이것은 일찌감치 2월 대의원대회 직후부터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교사 선언' 서명을 조직해 온 교사들의 노력이 거둔 성과이자 결실이다.

이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저항 의지를 광범하게 결집하고 강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교조 지도부도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활동가 사이에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정서가 커진 데에는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의 한계도 작용했을 것이다(해고자와 유치원 교사로까지 조합원 자격 범위를 넓히자는 운동이지만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교 내 다양한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작다).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이 정부 공격에 맞선 우회적 대응은 될 수 있지만 정부 공격 자체를 막을 해결책은 못 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금 두 전선에서 정부와 대치한다. 하나는 정부의 규약 개정 압

박과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에 맞선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특권학교 폐지, 교교평준화 확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업무 정상화 등 경쟁·차별 교육에 맞선 투쟁이다.

이 두 전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부의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는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경쟁·차별교육에 맞선 저항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노동운동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 연대

국제중학교 입시로 초등학교에서조차 경쟁이 강화되고,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등학교는 '교육 불가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폐해졌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려면 전교조의 투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규약 개정 압박·법외노조

화 공격 시도에 반대하는 운동과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을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노조 설립과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와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연대해 공동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자!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 하순에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

투쟁 속 연대가 커질수록 우리의 운동은 더욱 전진할 것이다.

김연오 전교조 교사

## 한눈에 보기

- 정부는 전교조가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고지라고 강요했다.
- 해고자 대부분은 일제고사 반대,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 지지, 학교 비리 폭로 등 정당한 행동 때문에 해직당한 경우다.
- 정부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이 보장하는 전교조의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한다.(법외노조화)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기고

##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 연대에 앞장서자”

급식과 행정담당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과학실험 준비, 도서관, 특수교육지원 업무, 감시단속(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실제로 지난해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 6천여 명이 파업을 벌이면서 학교를 지탱해 온 한 축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이 투쟁은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커다란 자극과 영감을 줬다.

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파업을 불사한 총력 투쟁'을 결의하며 6월 22일 3만 조합원 총궐기를 준비 중이다.

이에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로 화답해야 한다. 특히,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정규직 교사들의 연대가 중

요하다. 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교육부·교육청 등 사용자들을 압박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다.

## 한쪽 바퀴

한쪽 바퀴만으로는 자전거를 굴릴 수 없는 법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투쟁은 교사들의 수업 여건을 개선하는 길이기도 하다. 해마다 사무행정담당 노동자들이 해고되면, 정규직 교사들도 안정적으로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비정규직 교사가 늘면, 정규직 교사들의 노동조건도 나빠지기 십상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 왔다. 올해도 이런 전통이 이어져야 한다.

특히 기초 학교와 지역에서 연대를 더 확대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은 8월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들의 투쟁에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 투쟁에 대한 전교조 신입 지도부의 입장은 아직 불분명하다. 전임 지도부도 정규직화 등 영전강 교사 고용안정 대책은 회피한 체 제도 폐지만을 요구하는 부족함이 있었다.

물론, 영전강 제도 자체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영어교육 교사를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이 제도를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또 '영어몰입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도 정당하다.

그러나 영전강 교사들은 이런 제도

적 문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서 벗어나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일각에선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임용고사 통과자만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의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교사 양성체계를 절대시하는 관점은 협력·평등을 중시하는 진보교육의 논리에 어긋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와 비교사를 넘어 모든 교육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나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흠뻑 지지하자. 그리고 실질적 연대를 건설해 나가자.

## ‘교육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교조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요구하는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권학교, 일제고사, 학교성과급·학교평가’ 폐기, 혁신학교지원법 제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 중단 등이 주요 요구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자사고·국제중 등 특권학교들은 입시 경쟁을 강화하고 학교 간 격차를 확대하는 일등 공신이 돼 왔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취임 초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개선’을 모호하게 말하다가 최근에는 자사고 폐지는 없다며 전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으려 한다.

인천, 여수, 대전 등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론을 내세워 국제중이나 국제고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내놓아 지역사회운동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자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을 이용한 것이 논란이 되자, 등 떠밀려 감사에 들었던 서울시교육청은 엄청난 비리를 뒤흔치며 급급하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위원의 폭로를 보면, 대원·영혼 국제중 법인들이 내야 했던 사배자 장학금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국고로 지원해 왔음이 드러났다. 2010년부터 두 국제중 사배자 장학금의 80~90퍼센트가 국고에서 지원됐다.

이처럼 학교 서열화는 국가권력과 사학재단, 부자들의 역겨운 동맹 속에 이뤄져 왔다. 특권층만을 위한 학교 서열화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국제중, 자사고를 당장 폐지하고 중등교육을 평준화해야 한다.

아울러, 일제고사·학교성과급·교원평가 등 경쟁교육 정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경쟁 논리를 교육 부문에 도입한 결과는 가짜이나 창의성과 활력 없는 학교에 더 큰 압박을 가해 엄청난 긴장과 갈등을 초래했다.

교육 성취는 결코 시험 성적으로 환원될 수 없다. 교육에서 아이들을 쫓 세우고 경쟁시키는 시도는 교육에서 창의성과 배움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학생 사이에 그리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협력적 관계를 파괴할 뿐이다.

## 파괴

자의적이고 관료적인 '학교성과평가'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아이들과 교사들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직원 대폭충원, 학교급식이나 시설 개보수 등 교육 여건 개선으로 자원을 돌려야 한다.

혁신학교만이 아니라 전면계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적 낭비를 줄일 뿐 아니라 부유층에 과세해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단지 지배계급의 이익에 부응하는 분야로 학교나 교육과정이 '특화'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전인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더 나은 학교생활을 보장하려면 경쟁이 아닌 협력, 처벌이 아닌 지원 중심의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교육 위기 해소에 필요한 요구들은 많지만, 학교 서열화와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주요 경쟁교육책 폐기는 모두 특권집단들의 권력에 도전할 때 성취할 수 있다. 서열화와 경쟁은 단지 교육 부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논리에서 나오고,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진 시기에 지배계급은 아래로부터 대중적 압력이 없다면 실질적 개혁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

교사와 학교비정규직 등 교육 부문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과 노동운동의 힘이 결합돼 박근혜 정부와 사학법인, 기업주 등 권력자들을 압박해 양보를 성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경쟁과 이윤몰이를 거대한 불평등과 낭비를 낳는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인간의 필요에 기초한 사회에서 '경쟁·특권 교육'은 사라질 것이다.

정진희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에서 제기된 쟁점

# 물량 축소 압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특근 거부 투쟁은 지난 3개월 가까이 이 나라 지배자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들어 왔다.

이 투쟁은 대공장 조직 노동자들이 가진 막강한 힘과 잠재력을 보여 줬다. 지도부의 잘못된 합의 이후에는 기층에서 투쟁이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에 서 아쉬움도 남는다.

한편, 이번 투쟁 과정에서 사측의 ‘물량 축소’ 압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정치적 쟁점도 제기됐다.

특근 거부가 확대되자, 회장 정몽구는 “해외 공장 별 생산 증대”를 지시하며 업포를 냈다. 사장 윤갑한도 “특근 거부는 스스로 국내 물량을 포기하는 행동이고,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이런 사측의 압박에 혼란을 느꼈을 것이다. 사측은 이를 이용해 특근 거부 투쟁을 분열·약화시키려 했다. 특근 재개를 주장한 노조 지도자나 활동가들은 분명 이런 압력에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 물량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 조철도 최근 “현재 3교대 풀가동 중인 해외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근 거부로 미국 수출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일각에선 ‘미국 공장 증설’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정몽구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장·설비 이전은 쉽게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해외 신규투자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폭스바겐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신규 투자를 늘리기도 다 공장 가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현대차는 지난 수년간 유럽, 북미, 아시아 등에 공장을 짓고 해외 생산을 늘렸다. 이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도 위협하다는 불안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세계화’ 기업들도 자산·판매·고용 면에서 보면 ‘세계적’이 기보다는 ‘국민적’이다.

“GM은 자산과 종업원의 거의 3분의 2가 미국에 있고, 도요타도 종업원의 3분의 2와 자산의 절반이 일본에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경우 해외 자산과 고용도 압도적으로 선진국 내에 있다.”(빌런, ‘세계화와 신경제라는 신화’, 《세계화와 노동계급》, 책갈피)

## 유턴

게다가 해외 생산이 늘었다고 해서 국내 생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경제 위기 때문에 미국·일본 등의 대형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본국 유턴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현대차에서도 사측이 해외 생산을 가파르게 늘리던 기간 동안 오히려 국내 생산과 고용도 같이 증가했다. 세계경제 위기로 국내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입은 2008~09년을 제하면 말이다.

특히 2010년 이후 현대차가 특수를 누리며 호황을 구가하는 동안 국내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국내 설비 가동률이 1백퍼센트를 넘기기도 했다.

즉, 해외 생산이 늘어나는 동안 국내 노동자들도 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일해 온 것이다.

그런데도 세계 자동차 “빅5” 지위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현대차 사측은 주간2교대 도입의 전제로 생산량 보전을 끝까지 고집했고 일부 줄어든 노동시간을 별충하려고 안달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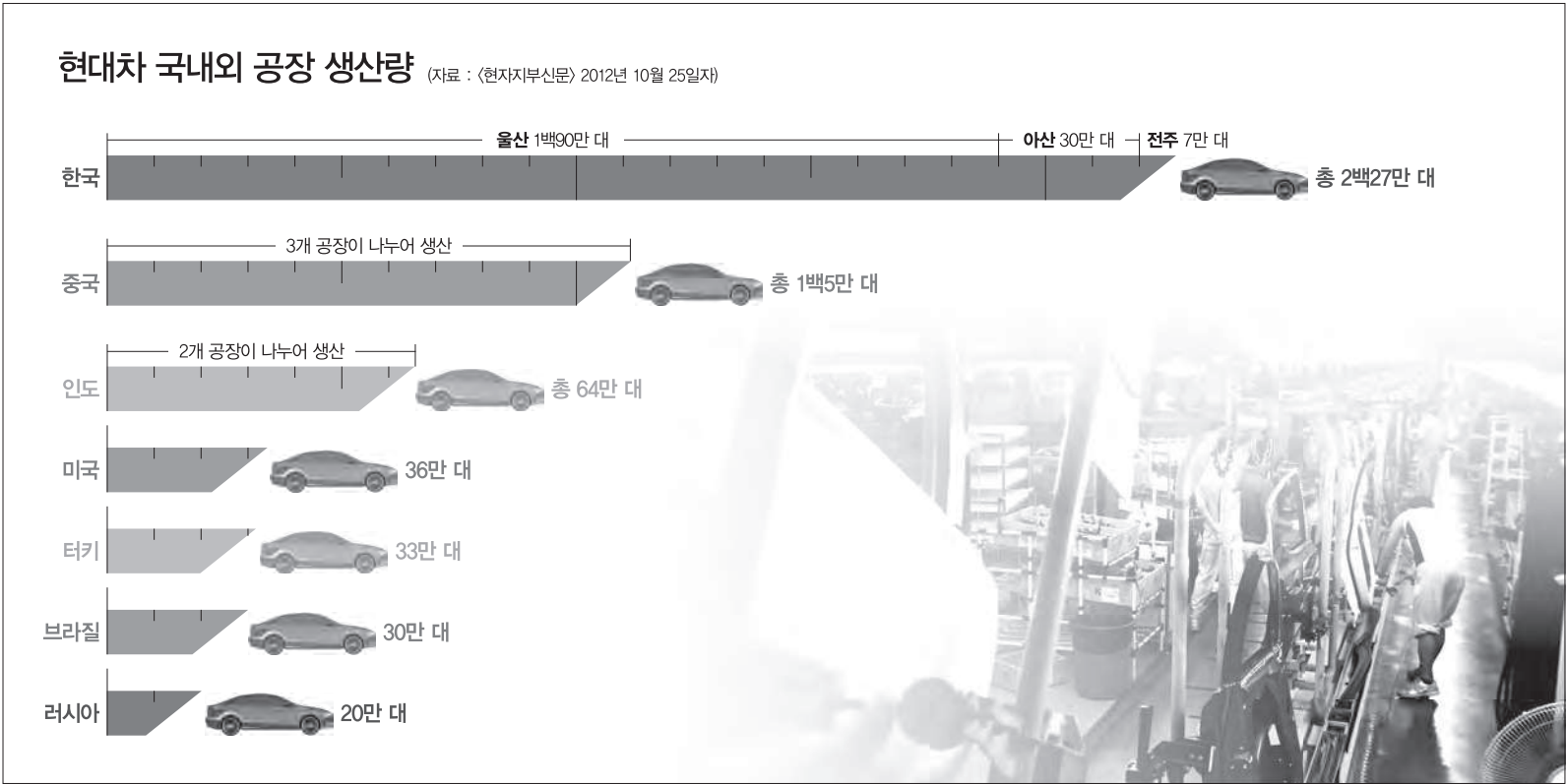
게다가 사측은 불법 파견을 외면한 채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유연화도 유지할 심산이다. 현대차 부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강점은 탄력적인 고용 조정뿐 아니라 독일식 노동 유연성”이라고 주켜세웠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시행됐어도 현대차 노동자들은 OECD 연간 평균 노동시간보다 4백40여 시간을 더 일한다. 밤샘노동은 사라졌지만 임금에서 산업과 특근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60퍼센트가 넘어서는 바람에 여전히 장시간 노동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번 특근 거부 투쟁은 중요하고 정당하다. 하지만 물량 논리에 휘둘리면 사측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며 투쟁을 발전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생산 물량 이전 압박에도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물량 확보를 둘러싸고 각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다.

따라서 물량에 얽매이지 말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급을 대폭 인상한 월급제를 요구하며 싸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만약 자동차 시장의 위기가 심화해 실제 물량이 줄어도 임금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 임단투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중요한 의제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김기선



해외에 공장이 있어도 여전히 국내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

영국 병사 살해 사건

# 무슬림혐오증을 부추기는 이간질에 속지 말아야

5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무슬림으로 알려진 흑인 두 명이 영국군 병사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다. 영국 정부는 전국에 테러 경계령을 내렸고 언론은 이슬람의 호전성을 강조한다. 우파와 나치는 이 사건을 이용해 인종차별과 무슬림혐오증을 부추긴다. 이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긴급 발표한 성명서를 소개한다.

인종차별주의자와 우익들은 5월 22일 런던 남부 울위치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을 이용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무슬림혐오증을 부추기려 한다.

그런 시도를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을 이용해 인종차별을 부추기거나 극우가 준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울위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사실이 알려질 게 거의 없는데도, 아비한 나치는 물론이고 “민을 만만” 소식통들도 특정 인종과 종교를 혐오하는 판에 박힌 말들을 마구 내뿜고 있다.

BBC 뉴스의 정치부장 닉 로빈슨은 이렇게 썼다.

“내가 살인범이 ‘무슬림처럼 생겼다’고 말한 것에 기분이 상한 사람을 보시오. 나는 경찰을 인용한 화이트홀[런던에서 많은 관공서가 있는 거리] 소식통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외다.”

인종차별적 조직인 영국수호동맹의 리더 토미 로빈슨은 이렇게 말한다.

“영국 국민은 우리의 용감한 젊은 병사를 공격한 이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제기탈, 이 놈의 나라와 국민들은 언제가 돼야 정치적 이슬람이 문제란 걸 알아먹을 텐가?”

보수당은 이번 사건을 긴축과 당내 분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기회로 본다. 보수당이 하는 말이라고는 “비상대책위원회”, “테러 사건”, “국민 단결”밖에 없다.

우리는 보수당이 이렇게 위선 떨며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그냥 뒤서는 안 된다.

역대 영국 정부들이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12년 이상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수십 만 명을 살해했다.

물론 개인적 살인은 “테러와의 전쟁”에 맞서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전쟁을 앞으로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을 더 끌고 가려 한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침략과 무인폭격기 사용과 폭격과 교문과 암살이 벌어지리라는 뜻이다. 상황이 이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번 사건처럼 충격적 방식으로 이런 야만에 대응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인종차별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 보수당에 반대해 단결해야 한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수백만 명 규모의 강력한 운동과 인종차별에 반대한 광범한 대중 시위가 보여 줬듯이, 이런 단결은 가능하다.

찰리 김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사무총장  
번역 차승일

그리스 반긴축 투쟁

# 저항하려는 노동자들과 주춤거리는 지도자들

그리스에서 긴축에 맞선 노동자 저항이 직면한 난관에 대해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R)의 지도적 당원이자 그리스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다.

지난주 그리스 교사노조 지도자들은 고등학교 교사 노동자들의 전국 파업 계획을 취소시켰다. 이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다.

그리스 정부는 교사들을 해고하겠다고 버르는 판국이다. 그리스 정부는 ‘시민동원령’을 이용했다. 이 법에 따르면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투옥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일 태세가 돼 있었다. 5월 중순 전국 각지의 노조 지회 총회에 고등학교 교사 2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 5월 말부터 시작되는 시험 기간에 파업을 벌이자는 안에 93퍼센트가 찬성했다.

정부는 교사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교사들과 함께 행동할 태세가 돼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고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매일 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한 지회 총회에서는 병원 노조에서 연대를 건설하고 있는 한 의사에게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지회 총회가 있는 다음날, 지회 위원장들은 함께 모여 교사들의 결정을 인준했다. 그들은 압도적으로 파업에 대한 원안에 찬성했다.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 [좌파] 정당들도 모두 교사들의 파업을 지지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벌이기에 좋은 조건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바뀐 것은 없었다.

노조 상층 간부들은 시험 기간에 파업을 벌이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고 했다. 노조 상층 간부들은 총파업을 벌이면 대중한테서 고립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좌파 정당인 시리자를 포함해 모든 정당이 이제는 노조 지도부의 파업 철회 결정을 찬성한다. 시리자의 입장 선회는 큰 영향을 미쳤다.

## 입장 선회

처음에 시리자는 극좌파들과 함께 파업 계획을 지지했다. 그러나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정부와 노조가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리자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의 득표를 떨어뜨릴지도 모르는 파업 때문에 비난받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고, 시리자 소속 노조 활동가들은 그것을 도왔다.

긴축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15만 개를 없애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그토록 강하게 교사들을 공격한 것이었다.

정부가 그리 강하게 나온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가장 잘 조직된 부문의 노동자들의 저항이 매우 거셌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들이 그랬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싶어 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1988년 파업의 경험을 되새기며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교사들은 시험 기간에 파업을 벌였다. 정부가 교사들을 법정 에 세웠지만, 교사들은 많은 요구를 따냈다.

당시 교사파업은 지지를 받았다. 지난 3년 반 동안 일어난 반긴축 투쟁으로 여론이 급진화한 지금 상황에서 교사들의 파업은 또다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시리자의 기층 당원들 사이에서는 시리자의 입장 선회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극좌파들은 다음 달 열릴 교사 노조 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9월에 새학기가 시작하자마자 파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안은 통과될 듯하다.

그러나 결정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노조 상층 간부들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현장 조합원들이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교훈도 있다. 의회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반자본주의 좌파가 필요하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54호 / 번역 차승일

말시즘 2013에서 ‘유로존 위기와 저항 그리고 좌파의 대안’을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8면.



한미동맹 60년

# 민주주의와 민중을 짓밟은 침략 동맹

한규한

윤창중이 미국에 가서 저지른 추잡한 성추행 덕분에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윤창중 사건은 반민주, 반민중, 침략의 한미동맹 역사에 어울리는 세레모니였다.

한미동맹이 공식화한 것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협정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기원은 1945년 8월 ‘해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의 한반도 분할과 친미 국가의 형성이 냉전 시기 소련 봉쇄 전진기지라는 한미동맹의 본질적 구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적어도 1960년대 한국이 독자적 자본 축적을 본격화하기 전까지 한미동맹은 ‘동맹’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비대칭적’이었다. 1945년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이래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미국은 점령하자마자 좌파가 지배적이던 한국 사회를 친일파와 극우파가 독세하는 사회로 만들었다. 그 과정은 야만적이었다. 우익 테러와 경찰 폭력이 난무했다.

가장 비극적 사례는 최근 영화 ‘지슬’로 관심을 끈 제4·3항쟁이다. 미국이 4·3항쟁을 야만적으로 진압하라고 부추긴 이유는 미군 철수를 앞둔 시점에서 이승만 정권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할지 모른다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미국이 친미 정권을 세운 의미는 분명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잔인한 독재 정권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리라는 것이었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협소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진척되는 데서조차 미국은 자주 장애물 노릇을 했다.

1950년에 터진 한국전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한미동맹의 기본틀을 확립했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미국에 넘어갔고, 미군이 대규모로 상시 주둔하게 됐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애치슨이 “한국전쟁이 우리를 구했다”고 할 정도였다.

한국전쟁 직전 미국은 세계 패권 전략을 좀더 공세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모색하고 있었다. 중국의 ‘공산화’와 소련의 핵실험 성공이 그 배경이었다. 또, 대규모 군비 증강을 통한 수요 확대로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으려는 의도도 중요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은 마치 9·11 테러처럼 울고 싶은 미국의 뺨을 쳐 준 사건이었다.

## 38선

미국의 개입으로 한국전쟁의 규모와 질은 바뀌었다. 대량 살상된 민간인은 대부분 미국의 폭격으로 사망했다. 특히 한미 동맹군이 38선을 돌파해 북한으로 진격하기로 한 결정은 대참사를 낳았다. 이 결정은 중국군을 한반도로 끌어들었고, 한반도 전역은 초토화됐다. 이는 오늘날 ‘작계 5027’, ‘개념계획 5029’, ‘작계 5030’ 등 한미 연합군이 기획한 일련의 북한 침공 작전계획이 얼마나 커다란 위협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준다.

미국은 중국군 참전을 이유로 핵무기까지 사용하려 했다. 정신 나간 일부 한국 우익은 핵무기를 터뜨려 북진통일을 완수하라고 미국을 응원했다.

미국의 핵무기는 냉전 시기 한미 군사동맹의 기본축 중 하나였다. 미국은 1958년 제4미사일 사령부를 창설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했다. 1970년대에 미국은 제한적 핵전쟁론을 한반도에 적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재래식 전투에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다.

2002년 부시가 발표한 대북 핵선제 공격 도кт린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반도에 존재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비핵 국가로서 미국의 노골적인 핵공격 위협에 직면했다.

주한미군이 상시 주둔하면서 주한미군 범죄도 심각했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1950년대 말까지 주한미군이 사살한 한국인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세 살짜리 어린이가 미군의 총에 살해됐다. 1957년에만 한국인 1백12명이 사살됐다.(<동아일보> 1957년 10월 13일자)



미국이 민주주의를 바란다고? 미국은 광주항쟁을 “사이공 함락 이후 동아시아 동맹국에서 벌어진 최대 위기”로 보고 학살을 지지했다. 당시 전남도청 앞.

## 베트남 파병에서 핵무장 야욕까지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은 베트남 파병이다. 그리고 이는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박정희는 미국의 환심을 얻으려 파병을 자청했다. 미국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1965년 들어 전투가 격화하자 파병을 요청했다.

한국은 거의 유일한 전투병 파병국이였다. 전 세계 여권이 파병 한국군을 미군의 용병쯤으로 여겼지만, 박정희는 개의치 않았다.

심지어 한홍구에 따르면 “당시 외무장관 이동원은 이미 한국은 미국에 예속된 국가라는 비난을 받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필리핀군의 30~40퍼센트밖에 안 되는 가난한 한국 청년들의 목숨값은 어느 미국 관리의 말마따나 “미국에 피와 재화를 아낄 수 있게” 해 줬다.

물론 파병은 한국 지배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한 미국 관리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 파병을 “알라딘 램프”

로 여긴다고 비아냥거렸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은 파병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미국한테서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전사 수만 명과 베트남 민간인 수천 명의 피를 발판으로 경제성장의 시동을 걸 수 있었다.

미국은 이승만 정권 이래로 독재 정권을 후원하면서 한국 민중의 민주주의 열망을 억누르기도 했다. 최근 우익 지배자들의 ‘사주’를 받은 우익 종편 언론과 ‘일베충’들이 1980년 광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망발을 내뱉었지만, 진정한 외부 개입 세력은 따로 있었다.

미국은 학살을 하러 가는 한국군의 이동을 승인했고, 항공모함을 부산에 배치해 학살을 엄호했다. 당시 미국은 광주항쟁을 “사이공 함락 이후 동아시아 동맹국에서 벌어진 최대의 위기”로 파악했다.

또, 이런 식의 개입은 처음도 아니었다. 미국은 박정희의 쿠데타를 진압하

기를 거부함으로써 쿠데타를 방조했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반대 투쟁이 격해지자 한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푸는 데도 동의했다. 특히 한일국교정상화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 구축을 위해 사활적으로 중요했다.

미국이 전두환 신군부 정권을 지지한 것은 1979년 말부터 본격화한 미국 패권 정책의 조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979년 연이어 벌어진 세계 경제 위기, 니카라과 혁명, 이란 혁명에 대응해, 미국은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재개했고 친미 독재 정권 지원 등 반동 정책을 강화했다.

## 박정희

물론 한미동맹에는 갈등도 존재했다. 한국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식민지 대리인이 아님을 종종 보여 줬다. 한미 사이 갈등과 긴장은 특히 1969년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심화했다. 당시 미

국은 베트남 전쟁 패배를 만회하려고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택했고,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감축시키려 했다.

한국 지배자들은 버림받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함께 미국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박정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미국한테 밤낮 놀려서 안 되겠소, ... 언제까지 미국한테 팔시만 받아야 하는지 ... 약소국으로서 큰소리칠 만한 게 뭐 없겠소? 우리도 핵개발을 할 수 없겠소?” 이 말은 시공간을 초월해 북한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어쨌든 한국 경제가 커짐에 따라 미국과 충돌하는 독자적 이해관계도 커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 박정희식 ‘민족주의’는 전혀 진보적이지 않았다.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미국 제국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지도 못했고, 핵무장을 시도한 것에서 보듯이 평화적인 것도 아니었다. 박정희의 ‘자주 국방’은 남북 간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시킨 반민중적 국수주의였다.

## 냉전 해체 이후 — 더 세계화한 침략 동맹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새롭게 조정됐다. 먼저, 한미동맹이 광역화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이래 최초로 1991년 걸프전에 파병했다. 그 후 유엔 평화유지군(PKO) 등의 활동이 크게 늘었다.

형식적으로 봤을 때, PKO 활동이 빠르게는 것은 한국의 유엔 가입으로 파병 기회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높아진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고자 하는 한국 지배자들의 야욕과, 소련 붕괴 직후 ‘팍스 아메리카나’를 천명한 미국의 패권 전략이 맞물린 결과였다.

한미동맹의 광역화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략에 대한 지원과 파병이었다.

또,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 봉쇄 전략의 일환이라는 성격도 띠고 있다. 최근 한미동맹의 노골적인 대북 적대 정책은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중국 견제책의 일환이다.

게다가 미국의 패권 전략이 바뀌며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

국군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방비의 상시적 증강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작전통제권 이양 등 ‘자주권’은 고양됐지만, 이런 식의 자주는 진보적인 것도 아니다.

## 국방비

주한미군 기지의 성격도 더 위험해지고 있다. 1983년 국방부 차관보 로버트 코머는 미국의 해외 배치 기지의 의의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의 전진 배치 전략은 우리의 전쟁을 남의 부동산 위에서 수행하려는 것.” 이는 오늘날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한 셈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때문에 한국 지배자들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한미동맹을 부차화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지배자들에게 한미동맹은 단

순한 군사동맹 이상이었다. 한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패권에 편승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는 전략을 취해 왔고, 상당 기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미동맹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한미 안보 동반자 관계 유지 및 발전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신인도를 지켜 주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며, 또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주변국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도 긴요하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앞으로도 평범한 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할 것이다. 평화

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에 맞서는 것은 여전히 진보의 주요 과제다.



**니카라과 혁명**  
1979년 중앙아메리카 니카라과에서 친미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혁명.

**걸프전**  
1991년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 구소련 몰락 후 자신이 세계의 지배자임을 동맹국들에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호령한다는 제국주의 슬로건.

**앞시즘 2013에서**  
▶ 미국의 ‘아시아 귀환’과 동아시아 불안정  
▶ 정전협정 60년 :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앞시즘 MARXISM 2013**  
▶ 더 많은 정보는 8면에.







진보의 진로 논쟁

#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는가

강동훈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1백 일 만에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수가 6백47개에 이른다고 한다. 하루 평균 6.5개나 설립될 정도로 ‘열풍’이 분 것이다.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효과이기도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년 내에 협동조합 8천 개 설립을 목표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적극 나섰다.

진보진영의 일부도 사기업·국가가 담당하는 경제와 달리, 협동과 연대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를 확대할 기회로 보고 협동조합 건설에 큰 관심을 보인다.

협동조합은 보통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사업체이자 결사체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일반적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와 대조된다. 주식회사는 가능한 비싸게 팔아 이윤을 최대로 늘려 주주들이 나눠 갖는 게 목표다. 반면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 향상, 고용 안정, 지역사회 발전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한다.

따라서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요즘, 협동조합의 이상이 새롭게 주목받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노동자·민중은 2008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 속에 복지가 축소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절망으로 내몰렸다. 2008년 경제 위기가 기업의 무한정한 이윤 추구 때문에 벌어졌는데 말이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아 국가가 경제에 개입했지만, 그 목적은 고통받는 보통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기업·금융기관을 살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윤·경쟁 시장주의가 아닌 새로운 대안 체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 때문에 전경련이 후원하는 <한국경제>는 “최근의 [협동조합] 열풍에는 주식회사에 대한 묘한 반대 정서가 내재해 있다”며 우려했다.

사실 경쟁이 아니라 협동,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 자본의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지향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과 비판을 담고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산업 자본주의의 출현과 거의 동시에 등장해 지금까지도 진보적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일 테다.

마르크스도 “어떻게 새로운 생산양식이 낡은 생산양식에서 자연적으로 발전하고 형성되는지를 보여 준다”하고 협동조합의 의의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기존 제도의 모든



근로자협동조합

비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늘어난 몬드라곤 협동조합 다른 기업과 경쟁해야만 하는 압력은 협동조합 이상을 갉아먹는다.

결합을 재생산하며 또 재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협동조합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도 지적했다.

## 재생산

사실 우리는 “체제의 모든 결합을 재생산한” 협동조합의 ‘타락’을 이미 봐 왔다. 일반 은행과 다름없이 높은 이자로 농민을 갈취하는 농협,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신용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이상을 실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라는 영국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이제는 거대 유통기업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은 협동조합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게 아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협동조합이 직면한 모순을 두고 고민하며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실 이런 모순들은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다른 기업처럼 시장을 확보하고, 투자를 더 많이 해야만 한다. 결국 협동조합도 더 많은 이윤을 남기거나, 비용을 절감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이런 압력은 협동조합을 점점 더 일반 기업처럼 움직이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유명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살펴보자.

1950년대 5명으로 시작한 몬드라곤은, 2010년 현재 금융·제조·유통 등의 업체를 갖고, 자산은 약 53조 원, 노동자 8만 4천 명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했다(물론 몬드라곤의 성공은 1960~70년

대 호황으로 스페인 경제가 급성장한 것도 한몫했다).

몬드라곤은 다른 기업에 뒤처지지 않으려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대거 만들었다. 해외에도 주식회사를 대거 설립해, 2010년까지 러시아·멕시코·중국·브라질·인도 등지에서 고용한 인원이 약 1만 6천 명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몬드라곤에 속한 기업 2백 60여 곳 가운데 대략 절반만 협동조합인 상황이다.

즉,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약해졌고, 주

식회사인 자회사에서 이윤을 얻어야만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협동조합이 성장을 우선하게 되면 민주주의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몬드라곤에서도 경영진의 권력은 점점 강해졌고, 조합원 총회는 늘 경영진의 투자 계획을 승인하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됐다. 총회 참석률은 갈수록 떨어졌다.

수익이 나지 않는 작업장을 폐쇄해야 하거나, 임금 삭감과 해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노동자

조합원들의 참여 의지는 줄어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의 지지자인 박승욱 씨도 “협동조합은 지나친 성장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사회를 뛰어넘는 사업의 성장은 그 자체로 결사체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시장경제의 변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미처 날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어하는 데는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 고립된 섬이나, 시장경제의 변혁이나

시장경제의 논리는 그 안에서 고립된 형태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평등의 섬들을 침식하고 마침내 침몰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협동·평등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시장경쟁이 아니라 민주적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1930년대 이래로 경제 계획은 옛 소련과 그 종속국들의 관료적 지령경제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 불신의 대상이 됐다.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모종의 시장경제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경제 전체가 민주적으로 조직될 수 없다. 경제적 우선순위를 다루는 집단적 결정 자체가 없는 게 시장경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존 국가 기구를 통해 민주

적 계획을 추진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 국가는 대중의 참여·통제를 배제하는 관료적·위계적 방식으로 조직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르크스·레닌을 비롯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기증의 민주주의 기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17년 러시아 혁명, 1936년 스페인 혁명, 1956년 헝가리 혁명 등 거대한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노동자 평의회들이 탄생했다.

이런 대안을 지향하며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키려면 건설해야 할 운동이 많다.

금융시장 통제를 요구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지배자들의 시도를 막아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간질하는 시도에 맞서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고, 부와 소득을 부자에게서 빈민에게로 분배하기 위한 운동 등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내에서 결국 침식·침몰할 고립된 섬을 만들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근본 변혁을 지향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 협동조합운동은 사회 변화에서 어떤 구실을 하는가

▶ 협동조합, 공상적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 11면으로 이어짐

## 협동조합의 허점을 이용하는 지배자들

지배자들 내에도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명박 정부가 제정했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꼽았다.

저들이 어울리지 않게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경제 위기 고통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비껴가려는 의도가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상용차 노동자들을 살인적으로 진압해 대중의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친 서민”, “공생 발전”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협동조합기본법도 제정했다.

저들은 이데올로기적 효과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노린다. 협동조합으로 일자리

를 창출하고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몬드라곤이 전체 기업 순위 7위를 차지하는 스페인에서도 공식 실업률이 26퍼센트가 넘는다.

물론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십사리 해고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

다는 압력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를 위한 가치는 후순위로 밀리기 십상이다.

실제로 몬드라곤도 노동자 20퍼센트가 비정규직이어서 쉽게 해고할 수 있다. 게다가 몬드라곤은 1991~92년 위기 때 임금을 30퍼센트까지 깎았다.

특히 국가가 제공해야 할 복지를 협동

조합이 제공하게 한다는 정부의 생각은 우려했다. 실제로 협동조합 전도사라 불리는 김성오 씨도 정부가 협동조합기 본법을 제정한 배경에는 “복지 수요를 협동조합으로 해결하자”는 생각을 확대해 “보편 복지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한몫” 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 11면으로 이어짐



시리아 혁명

# 미국이 혁명을 낚아채려 한다

김종환

미국이 시리아 혁명에 개입하는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최근 혁명 세력과 아사드 정권이 모두 참석하는 ‘평화’ 회담을 6월 중에 열겠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글로벌 동맹’ 운운하며 한국도 시리아 개입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시리아 혁명 세력한테 지난 2년간 8만여 명을 학살한 아사드 정권과 ‘대화’ 하라고 한다. 이런 압력 때문에 아사드와 ‘대화’하려고 했던 시리아 반군연합 초대 의장은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혀 사퇴했다.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매우 역겨운 것이다.

아랍 혁명으로 미국은 이집트와 튀니지의 친미 독재정권을 잃었다.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의 친미 독재자들은 혁명 열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시리아의 아사드까지 무너지면 아랍 민중의 자신감은 더 커질 것이다. 이게 미국이 걱정하는 바다.

무엇보다 시리아에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경비권’ 이스라엘이 더 고립될 수 있다. 그동안 아사드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말만 거칠게 하며 자신을 ‘반제국주의’로 치장해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사드가 무너지면 “지난 40년간 모범적이었던 [이스라엘-시리아 접경지대] 골란 고원의 평화가 깨지고 ‘테러리즘’이 득세할 수 있다” (군 대변인) 하고 우려한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아사드를 지원한 러시아도 끌어들이고 있다. 러시아한테 시리아는 아랍 세계에 남아 있는 마지막 동맹이고, 러시아 해군 기지도 그곳에 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듯하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것은 ‘평화 회담’이 아니라 ‘반혁명 회담’이라 할 만하다.

이런 열강들의 주판알 놀음에도, 시리아 혁명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동시에 서방 세계에 가졌던 환상은 갈수록 빛이 바래고 있다.

지난해 시리아 반군연합이 출범하고



사진 출처: Lens of young Hadeb (페이스북)

혁명 속에서 단결한 시리아 민중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들을 이간질하고 낚은 오물을 되살리고 있다.

각국이 앞다퉂 이들을 시리아 유일 집권 세력으로 인정할 때만 해도 일부 시리아 인들은 서방의 지원이 몰밀 듯 들어오길 기대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 약속

“우리가 부대를 통합하면 정통성을 인정하고 돈과 무기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바뀐 것은 없다” 하고 반군연합 인사는 토로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시리아 혁명 세력의 일부로 활약하는 이슬람주의 단체 ‘누스라 전선’을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고 자유시리아군\*한테 아사드가 아니라 이들에게 총구를 겨누라고 종용했다. 이는

시리아 혁명 배후에 ‘테러 집단’이 있다는 아사드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올바르게도 반군연합은 즉각 이를 거부했다. 현지에선 이슬람 국가를 지향하는 세력과 나머지 활동가들 사이에 대표성과 미래의 국가상을 두고 일부 긴장도 있지만 대체로 협력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수도 다마스쿠스의 한 혁명가는 “누스라 전선 문제는] 시리아인들이 해결할 문제지, 서방이 우리에게 누가 테러리스트고 누가 아닌지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질라 말했다.

한편, 알라위파 시리아인들은 종파 간 갈등에 반대해 3월 망명지에서 혁명을 지지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알라위파는 아사드가 속한 종파다.

이 모든 사례는 시리아인들이 민주주의 경험이 없고, 종파 간 분열이 심해 스스로 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서방의 거짓말을 반박한다.

지난 2년 넘게 시리아인들은 놀라운 용기와 인내와 지혜를 발휘하며 온갖 어려움을 헤쳐 왔다. 우리는 혁명을 탈취하려는 서방의 개입에 반대하며 시리아 혁명의 진정한 승리를 바라야 한다.

자유시리아군  
혁명 와중에 정부에 맞서 도시와 마을을 지키려고 결성된 민병대. 이후 탈영한 정부군 병사들이 합류하며 군사력을 증강했다.

##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한 이유

올해 들어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세 차례 폭격했다. 그 배경을 알려면 이스라엘과 시리아·이란이 오랫동안 경쟁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나라 레바논을 이해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을 침공했고,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난민 수천 명을 학살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레바논 일부를 점령했다.

레바논의 이슬람주의 단체 헤즈볼라는 시리아와 이란의 지원 아래 이스라엘에 분노한 사람들을 규합하며 성장했다. 마침내 2000년 5월, 헤즈볼라가 선봉

에 선 레바논 저항 운동은 이스라엘을 쫓아냈다. 미국은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이란을 ‘악의 축’이라 부르며 맹비난했다.

2006년 이스라엘은 다시 레바논을 침공했지만, 전 세계의 예상을 뒤엎고 패배했다. 무능한 정부군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격퇴한 헤즈볼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정권을 잡았다.

그런데 2011년 시리아 혁명에서 헤즈볼라는 아사드 정권을 옹호했다. 오랫동안 아사드 부자가 자신을 지원했고, 그들

이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저항세력 하마스가 아사드에 맞서 혁명을 지지한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다.

지난 2년간 헤즈볼라는 혁명 세력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며 아사드의 용병 구실을 했다. 이 때문에 본국에서도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스라엘은 한때 아랍 세계 반이스라엘의 선봉이었던 헤즈볼라의 정치적 추락을 즐기고 있다. 또한, 이 틈을 타 헤즈

볼라의 보급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시리아를 폭격한다. 아랍 혁명 진영은 독재자에 반대하면서 미국과 미국의 경비권 이스라엘에 맞서야 한다.

또한 한국은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이 벌어진 지역에 사실상 헤즈볼라를 감시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군대를 파병했다(동명부대).

시리아 혁명의 여파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갈등이 격화하면 한국군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동명부대는 즉각 철군해야 한다.

시리아 지역조정위원회

## “우리는 혁명의 자녀들입니다”

시리아 혁명 시작부터 시위를 조직하고 혁명 신문을 발행하는 풀뿌리 조직인 지역조정위원회가 도처에서 생겨났다. 3월 튀니지 세계사회포럼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알려졌다.

“지역조정위원회는 혁명의 자녀들입니다.

“자유시리아군이 도시를 해방하자마자 우리는 사실상 정부 구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 저항 세력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정권이 여전히 중앙 은행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했고 기초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도 벅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정권이 공장, 발전소, 제빵소, 병원처럼 필수적인 기간시설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야채와 빵 같은 생필품을 조달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항쟁 와중에 생겼기 때문에 지역조정 위원회들은 단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표를 선출하지만 소수는 임명되기도 합니다.”

## 야채와 빵

지역조정위원회에는 세속주의, 민족주의, 좌파, 전통적 무슬림 단체가 있고 이슬람주의 세력도 일부 포함돼 있다.

지역조정위원회는 서방이 돈으로 위원회를 통제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가끔 외국 단체가 우리 지역에 연락이 닿으면 그들은 지역조정위원회를 약화하려고 자기 입맛에 맞는 개인이나 단체에 자금을 주고 합니다.

“[서방 지원에 몰두하는] 반군연합도 자신들의 통제에 따르는 위원회를 따로 임명해서 자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들은 혁명이 전진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 40년간 우리를 지배한 정권에 맞서 혁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혁명 속에서 우리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일을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시리아를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 추천하는 책

### 《혁명이 계속되다 —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2》

알렉스 캘리니코프, 사메 나기브 외 지음.  
김하영 역음, 책갈피, 304쪽, 12,000원

## ▶ 10면에서 이어짐

사실 유럽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계기는 1970년대 초 이탈리아의 ‘사회적 연대 협동조합’에서 비롯했다. 1970년대 경기 침체로 실업이 늘자 기존 복지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웠고, 이를 사회적 경제로 대체하려 한 것이다.(장원봉 성공회대학교 사회적이업연구센터 연구교수)

## 복지

그러나 협동조합으로는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충분히 제공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최근 박근혜 정부가 국공립 교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알아서 교육시설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참가

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돈 있고 참여가 가능한 사람들로 한정될 것이다.

그래서 심심해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나라에서 책임져야 할 것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보육 시설은 프로그램이 좋은데 그런 것을 국공립 시설에서 하면 얼마나 더 좋

겠습니까?” 하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지배계급은 긴축을 추진하며 협동조합을 통해 민영화도 추진한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간호사들이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 아동과 노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도록 하겠다”며 NHS에 대한 국가 책임을 약화시키려 했다.

진정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려면, 정부가 나서서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늘려야 한다.

협동조합을 강조하며 자신의 책임을 은근슬쩍 민간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시도를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정선영



# 법정에 올려 퍼진 쌍용차 투쟁 연대의 목소리

박근혜 정부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뒤집은 것도 모자라,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폭력으로 철거했다. 노동자들이 1백71일 동안 높은 철탑에 올라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며 투쟁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냉혈 정부다.

그뿐 아니라 투쟁에 연대한 사람들을 마구 잡이로 기소해 사회적 분위기를 위축시키려 한다.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벌금 폭탄'을 맞았다. 벌금 액은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레프트21〉 김지윤, 김종환 기자도 지난해 6월 "함께 실재! 희망 건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두 사람은 부당한 탄압에 맞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당당하게 쌍용차 투쟁의 대의를 방어하고 검찰과 이 사회 권력자들을 비판했다.

다음은 두 기자의 최후진술문이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 볼 수 있다.

김지윤 최후진술

## “노동자를 짓밟는 정부가 악랄한 ‘슈퍼 갑’입니다”

2009년 쌍용차의 소유주였던 상하이차는 경영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 2천6백46명을 해고했습니다. 제대로 투자하기는커녕 이윤과 핵심 기술 빼가기에만 혈안이었던 상하이차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오죽하면 해고하겠냐”며 ‘먹튀’자본을 옹호했습니다. 깊어 가는 경제 위기의 고통과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를 본보기 삼았습니다.

경찰은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테이저건을 쓰고 최루액을 헬기로 살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최루액을 씻어낼 물조차 없었습니다. 2009년 평택 공장은 야만이 지배하는 전쟁터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야만이 비극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

다. 3천여 명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이 파괴되고, 쌍용차에서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취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노동자들과 그 가족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외쳤던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부도 이전 생산량을 회복한 지금도 해고 노동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살인이나 다름없는 해고를 강요하는 사측, 살려 달라는 절규를 짓밟는 정부와 경찰이야말로 이 사회의 ‘슈퍼 갑’입니다.

쌍용차 부실과 매각·먹튀의 책임자, 부동산 투기와 탈세·병역기피 등 온갖 부정부패로 범법된 자들은 뽕뽕 거리며 삽니다. 그런데 정작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차를 보면서

자신의 불안정한 처지와 미래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대회는 이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려는 자리였습니다.

[6월 16일] 여의도에 모여 대한문으로 행진한 수천 명의 걸음이야말로 우리 사회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오히려 이 걸음을 막아치고 위협하고 참가자들에게 무더기 소환장을 날리는 경찰과 정부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법정에서 저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막고 정의를 실현하려 한 시민 수천 명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살인파도 같은 정리해고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양심을 지키려는 청년이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4월 26일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집회'에 참가한 김지윤 기자.

김종환 최후진술

## “이것은 정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검찰은 제가 교통을 방해했다고 문제 삼지만, 그것은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정부와 사장들은 쌍용차 해고의 진실을 묻어 버리고, 돈벌이가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하길 바라는데, 제가 그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권력자들은] 2009년 파업 당시 테러 진압 무기까지 동원해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쫓겨난 쌍용차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싸우고, 저 같은 사람들이 연대하면서 다시금 문제가 불거지는 게 싫었을 것입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가 집계한 바로는, 지금까지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됐다고 합니다. 그 많은 기소 건수가 단지 개인들의 교통방해 등에 관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짓말입니다.

검찰과 권력은 저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가족이 부당스러워 내곡동 사건을 기

소하지 않았다’고 말한 게 불과 반년 전입니다. 검찰이 저를 기소하기 직전 줄줄이 터진 사건들만 봐도, 부장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과 대기업한테 뒤통수 먹은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할 때까지 개혁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문자를 올리더니, 정말 박근혜 당선 바로 다음 날 저를 기소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검찰이 ‘법과 질서’를 운운하며 저를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쌍용차 문제는 단순히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고, 비정규직, 착취에 맞서 싸운 대표적 싸움입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4년간 사망한 노동자 24명뿐 아니라, 향후 ‘먹튀’에 맞서 싸울 노동자들,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반년 넘게 철탑에서 농성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는 정리해고자 10만 명 모두를 ‘세계 자살률 1위’에서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노동자 투쟁과 연대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월 쌍용차 무급휴직자 전원이 복직했습니다. 운동의 압력이 아니었다면 쌍용차 사측은 절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거리에서, 철탑에서, 대한문 앞에서 싸웠고, 제가 연대한 운동이 부족하게나마 희망을 일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해고자들은 복직하지 못하고, 중구정성이 ‘꽃을 심겠다’고 사람을 철거한 것이 보여 주듯 정부와 사장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권력자들은 제가 벌금을 받고 위촉되길 바랄 테지만 어렵겠는 소리입니다.

제 행동은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의 정의를 세우는 행동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저처럼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행사 참가는 정당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지난해 6월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함께 실재! 희망 건기’ 대회에 참가한 김종환 기자.

서평 |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 비밀 외교 문서가 보여 주는 추악한 진실

이 책은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드러난 한국 지배자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면모에 관한 이야기다.

무엇보다 이 책은 폭로된 비밀 외교 문서들을 통해서, 그동안 의심하고 경고했던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들춰낸다.

지배자들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막대한 혈세를 들여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무기를 사들여 동아시아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일제에 의해 ‘위안부’로 동원돼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사과와 보상을 받을 기회를 날려 버렸고, 일본이 독도 소유 야욕을 드러내는 것을 묵인했다.

국민이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권리

를 내다 팔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FTA에 서명했고, 외국 투기자본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은행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겨 달아나도록 협조했다.

이 책은 지배자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얼마나 뻔뻔하게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지도 보여 준다. 지배자들은 언론과 대중 앞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반대로 말했다.

FTA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말하면서 주한미대사를 만나서는 재협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룬스타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룬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홀가분히 매각하고 떠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배자들은 여러 사회 세력과 대중이 의견을 개진하고 개입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밀실에서 진행했고, 그러고서 모든 일이 기정사실화된 뒤에는 ‘국익’을 들먹이며 정당화했다.

밀실

이 책에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이 왜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 주는 사례도 있다. 2008년 한국은 아시아 주요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했다. 미국은 개방 압력에 저항한 대만과 일본을 압박하는 데 한국의

사례를 활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08년 한국에서 일어난 촛불 항쟁은 대만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패로 작용했다. 대만은 한국보다 1년 6개월여를 더 버틴 끝에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했지만, 대만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터져 나오자 이듬해 초 재협상을 거쳐 쇠고기 수입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

한편 박근혜 정권 역시 이런 이명박 정권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취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지만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만큼이나 비민주적이고, 친미적이고, 친자본적이면서,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안전은 안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김용진 지음, 개마고원, 400쪽, 16,000원



중에도 없다는 점이 계속 확인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겪은 경험들을 되새기면서 박근혜 정권에 맞서야 한다.

강병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 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로 용기백배한 투쟁

케이블방송 자원은 노동자들을 고용 형태, 업무 실적, 원하청 구조로 갈라 놓고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왔다. 대규모 외주화·하청화로 정규직이던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가 되고 협력 업체 직원이 됐다.

2007년 맥쿼리·MBK파트너스 등이 케이블방송 업계 3위이자 수도권 1위인 씨앤엠(C&M)의 대주주가 된 뒤, 도급 단가는 동결됐고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열악해졌다. 그 과정에서 2012년 이후 씨앤엠은 5백억 원을 남겼다. 업계 1위인 티브로드도 1천5백억 원을 벌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1백만 원도 안 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김영수 케이블비정규직지부(씨앤엠) 지부장은 협력 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소개했다.

“단가가 낮고 일이 힘들어 이직률이 높다. 고객 접수를 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차감한다. 맥쿼리가 인수하기 전 씨앤엠에서 분사할 때 정직원인 70퍼센트, 하청 하도급이 30퍼센트였는데 현재 30퍼센트만 정직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2월에 노조를 결성해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 달에 이틀밖에 쉬지 못한다. 많게는 업무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이다. 문화 생활이나 다른 활동을 할 여유가 없어 법정 근로 시간인 주40시간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4대 보험 적용, 고용안정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원청과 하청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나몰라라 한다.

희망연대노조 소속의 정규직 노조인 씨앤엠지부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도 함께 내걸고 싸우고 있다.

‘공동투쟁·공동타결’을 강조하는 씨앤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는 노동운동이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정규직 노조의 강력한 지원과 연대 덕분에 가능한 일



노동자는 하나다 5월 15일 대한문에서 열린 ‘케이블 노동자 합동 문화제’에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이었다.

김영수 지부장은 “희망연대노조와 씨앤엠지부가 케이블비정규직노조를 만든 일등 공신”이라며 “우리 문제를 본조와 정규직지부가 열심히 조직했다. 미안함과 고마움 등 신뢰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귀감

정규직 노조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지원하면서 지난 2년간 케이블비정규직을 50퍼센트 이상 조직할 수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 이도훈 지부장의 말이다.

“그동안 씨앤엠지부가 입단협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도 계속 넣었는

데 사측은 남의 회사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주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비정규직 노조를 조직하게 됐다.

“2010년 파업 투쟁이 승리한 후, 희망연대노조가 씨앤엠 산하 22개 협력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했다. 2011년 초 강남권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조직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희망연대노조와 씨앤엠지부에서 15인 안팎의 특수조직팀을 구성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대1로 만나면서 올해 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동안 씨앤엠지부의 투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합원들과 교육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감

대와 절실함을 공유했다. 다른 노조의 사례를 얘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얘기했다.”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와 단결이 처음부터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2010년 씨앤엠지부의 파업 당시 많은 업무가 협력 업체로 떨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도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만드는 것을 도울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를 의심하면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며 믿지 않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서로 불만이 있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많은 부분에서 업무가 연결돼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케이블 설치를 한 후에 정규직 노동자가

불량 여부 등을 검사하는데 정규직이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패널티가 많아졌다.

“케이블비정규직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구조적이라는 것을 서로 인식했고 지금은 협력해서 잘 해결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서로 만나 얘기하면서 신뢰가 쌓였고 최근에는 권역별 조합원 모임도 함께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는 하나라도 더 가진 자들이 손 내밀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 사례가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거다.”

이 ‘아름다운 연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단결할 때 두려울 게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김은영

기고 |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 ‘조삼모사’로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전국이 들쭉이는 가운데 5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급여 도입 방안과 실행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수언론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지 14년 만에 가장 커다란 폭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질했다며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정부를 치켜세웠다.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가? 우선 기존의 통합 급여 체계는 생계·의료·교육·주거·출산·자활·장제 7개 부문의 급여 항목을 수급자에게 일괄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한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7가지 급여를 모두 받지만,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끊기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별 급여로 바뀌면 수급자에게 분야별로 수급비를 따로 책정해 지급한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박근혜 정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주를 현행 최저생계비(4인 기준 월 1백86만 원)의 1백20퍼센트에서 중위소



득(4인 기준 월 1백92만 원)의 50퍼센트로 확대하면, 대상자가 3백40만 명에서 4백38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언뜻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재보다 80만 명이 증가해 2백20만 명가량이 된다. “이 거 참 괜찮네” 하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수급자 수는 외형적으로 늘지만 실질적 혜택은 감소한다. 한마디로 ‘비늘 만한 것을 몽둥이 만하다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다. 기초

생활보장제도는 무엇보다 가난한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낮은 보장 수준과 광범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그동안 최저생계비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1999년에는 표준가구 평균소득 대비 40.7퍼센트고 중위소득 대비 45.5퍼센트였지만 2008년에는 각각 32.8퍼센트, 36.8퍼센트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생계비\*는 실질적으로 소득 분배 기능보다는 수급자 탈락 기준으로 기능했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선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더불어 불안정한 수급자의 삶을 만들어 왔다.

‘도덕적 해이’

이런 시점에 개별 급여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빈곤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도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를 다르게 지급받고 있으며, 자가 가구나 무상임대거주자의 경우 낮은 주거급여를 보장받고 있다. 교육급여는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만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장례나 해산급여\* 역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한다. 의료급여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야 할 때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양상을 보면 통합 급여 체계에서 수급자들이 마치 그동안 불필요한 급여를 받았다는 식으로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대선 전 제시했던 복지 공약들을 당선 1백 일도 되기 전에 일찌감치 철회하지 않았던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소난치성 질환) 진료비 1백 퍼센트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밝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

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에 놓인 가난한 사람 4백만 명의 운명을 직접적으로 좌우할 수도 있는데도, 충분한 사회적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상식이 돼 버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의 조처는 논의조차 없이, 마치 ‘원숭이에게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의 도토리’를 주는 방식의 술수를 이용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고 보육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많은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이 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낮게 정할수록 보장받는 사람은 줄어든다.

해산급여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게 아이를 낳기 전후에 지급하는 돈.

필자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은

맑시즘 2013에서 빈곤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 더 많은 정보는 8면에.

맑시즘  
MARXISM 2013



#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6월 5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 공무원

해고자 복직, 노조합법화, 총액인건비제 폐지

##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해고자 복직·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공무원노조 조합원 49명을 무차별 연행했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라 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온갖 탈세와 비리, 전관예우 등 진정한 '불법'으로 가득 찬 박근혜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과 헌법이 보장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에게 '불법'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한편, '작은 정부', '공공서비스 질 향상' 운운하며 도입한 총액인건비제는 인력 부족, 공공기관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져 왔다. 또한, 올해 박근혜 정부는 '조선일보'가 주문한 공무원연금 개악도 추진할 듯하다.

이런 때 공무원노조가 '해고자 복직·노조 합법화'와 함께 총액인건비제 폐지, 임금인상,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을 중심 사업으로 삼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1.5권도 안 되는 노동권만으로는 제대로 싸우기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10년간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해 왔다. 해고자 복직 요구도 이와 연결돼 있다. 대다수 해고자가 2004년 '특별법 폐지·노동 3권 보장'을 위한 파업에 참가해 생겼기 때문이다.

### 노동3권

그런 면에서 최근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민주당 한명숙 의원과 협의해 발의한 공무원노조 특별법 개정안은 아쉬운 점이 있다. '업무총괄 6급'과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서 정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듯한데 공무원노조총연맹(이하 공노총)조차 '5급 이하로 확대'를 주장하는 마당에 이에도 못 미치는 법 개정 추진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으로 해고자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또, 민주당이 법 개정을 진지하게 추



5월 21일 안행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가 연행되는 공무원 노동자들.

진하리란 보장도 없다. 공무원노조가 국회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은 해고자 원직·복직 법안도 민주당은 정부를 핑계대며 소극적이었다. 더욱이 특별법을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 정부였다.

물론 공무원노조는 정부 탄압 속에서 한차례 특별법 수용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 그리고 분리의 아픔을 겪었고, 다시 노동3권을 내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노동자들이 특별법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도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온갖 제약으로 가득한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며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악법의 멍에를 지지 않고 싸

울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정부는 비열하게도 공무원노조끼리 갈라치기 해 단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49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연행한 다음날 안전행정부 장관은 보란듯 '합법' 공노총과 간담회를 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되는 이때 이런 대화와 협상만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의도는 '강성인' 공무원노조는 무시하고 탄압하고, 온건한 공노총과 대화하면서 연금개악 등 굵직한 공격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의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박천석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 연이은 공무원 자살

##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박근혜는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과 업무 스트레스로 죽어 나간다.

올해 들어 업무 폭증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건강 실태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사회복지 공무원 10명 중 4명 가량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우울 상태라며 심각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상태가 우리 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인력 충원이 아니라 월 4만 원의 수당 인상으로 때우려 한다. 인력 부족과 업무 스트레스로 죽음까지 결심하는 노동자에게 월 4만 원은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사회복지 공무원만이 아니다. 교육청 공무원 2명과 법원 공무원 3명도 올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 법원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43명이 사망했고, 그중 15명은 자살이다.

최소한의 인력 충원조차 가로막는 총액인건비제'와 인력 부족이 공무원 노동자들을 병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ILO 통계 자료를 봐도 우리 나라는 '전체 노동력에서 정부 고용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다. 이미 가장 '작은 정부'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인력 부족에 대처해 '시간제 공무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박근혜가 취임식에서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해고자 원직 복직과 노조 합법화'뿐 아니라 총액인건비제 폐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다.

진정한 '국민 맞춤형 복지'는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적어도 유럽 수준으로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 공무원 노동자들이 더는 헛되이 죽지 않을 것이다.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총액인건비제

국가가 인건비 총액을 정해 임금과 고용을 통제하는 제도. 이 때문에 중앙·지방 정부는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만 양산했다.



## 인하대

## 학생들의 투쟁으로

## 학교의 구조조정 시도를 막아낸다

대학이 곳곳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인하대에서는 2011년에 독일언어문화전공이 사라지고 문화경영전공이 생긴 바 있다. 그런데 4월 30일 학교 당국은 또다시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4년부터 예술체육학부를 분리해 다른 단과대에 통합하고 아태물류학부를 아태물류학과로 격하하는 내용이었다.

예술체육학부는 2004년에 설립됐고, 네 개 학과(미술전공·시각디자인전공·연극영화전공·생활체육전공)로 이뤄져 있다. 학교 당국이 애초에 제시했던 '발전 계획'은 미술전공과 시각디자인전공을 더 세분화하고, 음악전공도 신설해서 '예술대학'과 '체육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안은 오히려 미술전공·연극영화전공은 문과대학으로, 생활체육전공·시각디자인전공은 생활과학대학으로 흡수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학교 당국은 분리·통폐합의 이유로 "취업을 저조로 인한" 문과 계열 위상의 하락을 막고, "정부의 예술 관련 프로젝트나 연구 사업을 따내"는 것 등을 내세웠다.

아태물류학부도 2004년 신설돼, 차후 물류대학으로 격상될 '발전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2009년 국제경영인증(AACSB) 제도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경영대학으로 흡수·통합시켰다. 이번에는 아예 과로 격하시키려고 하면서, 학교 당국은 아태물류학부에 전액 장학금이 여럿 있지만 그만큼 "아웃풋"(결과)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 당국의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학제 개편 계획에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예술체육학부와 아태물류학부 학생회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



학교의 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는 학생들.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한 서명도 받았다. 문과대학 학생회는 구조조정 찬반 설문조사를 벌이고, 확대간부총회를 소집했다.

5월 7일 예술체육학부 학생들은 팻말을 들고, 학내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쳤다. 9일에는 아태물류학부 학생들이 전체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팻말을 들고 학내 행진을 했다.

이런 행동들 직후에 학교는 예술체육학부와 아태물류학부를 기존처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신속하게 입장을 발표하고, 단결해 행동하고 더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학교의 구조조정 시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 측이 취업률 등을 이유로 학제 개편 같은 구조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경제 위기가 깊어져 취업이 쉽지 않고,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번 통쾌한 승리의 경험은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오선희 인하대 학생

## 이화여대 식당 노동자

## 학교의 꼴사나운 '갑'질에 맞서 일어서다

이화여대 식당 노동자 13명이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대분회에 가입했다. 얼마 전 식당 노동자와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노조에 갓 가입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식당 노동자들은 학교에 직고용된 직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직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차별받았다.

식당 노동자들은 몇 년 전 직원노조(한국노총 소속)에 가입하려 했는데 거절당했다. '직종이 다르다'는 게 이유였다. 그래서 서경지부 이대분회에 가입한 것이다. 그러자 학교 당국과 직원노조는 '왜 직원노조에 가입하지 않느냐'며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다.

학교 당국은 식당 노동자들의 처우는 다른 직원만큼 올리지 못하겠다고면서도 정년은 똑같이 59세라며 퇴직 협박을 해댔다. 마치 '갑'질을 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정말 제멋대로다.

식당 노동자들은 학교 당국이 강요한

끔찍한 노동 강도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뎌 왔다.

하루 수천 명이 이용하는 학내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겨우 스무 명이다. 그중 3분의 1 이상이 일용직이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같이 일할 직원을 채용하라고 하자, 학교는 오히려 일용직 비중을 더 늘릴 예정이라 답했다.

식당 노동자들은 15년을 일하나 3년을 일하나 월급이 똑같다.

### 임금 착복

이게 다가 아니었다. 식당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후에 학교가 그동안 연장근무 수당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적게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 당국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한 것이다. 8천억 원이나 쌓아 놓은 적립금은 총장이 한 말과 달리 "너무 깨끗하고, 알뜰"하게 모은 게 아니다. 더럽고 치사하게 모은 것이다.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현장 매니저는

'대통령'이라고 불린다. 어머니뻔 되는 노동자들에게 반말은 기본이요, 폭언과 모욕은 옵션이었다. 노동자들은 시정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업무를 정말 잘한다"며 되레 '대통령'의 기를 살려 줬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이제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말 통쾌하다.

10여 년간 학교 식당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얼굴 붉히지 않으려 했어요. 근데 이제 '이래서 사람들이 깃발 들고 나가는구나' 싶어요."

이제 학교 총무처는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온다. 그러나 교섭은 아니라고 발뺌한다. 뻔뻔한 총무처 처장이 식당에서 먹는 쌀이 아깝다. 학교는 당장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대모임은 식당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한다.

양효영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대모임 활동가



# 독자토론광장

6월 5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Letter@left21.com

## 드라마 <직장의 신>은 끝났지만 저항의 스토리는 계속된다

입사 16년차 직장인인 나는 최근 드라마 <직장의 신>에 푹 빠져 있었다. 한 달 한 달을 근근이 버티며 살아가는, 나와 처지가 비슷한 직장인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드라마 주인공 미스 김이 상사에게 대놓고 막말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속이 후련하게 뚫렸다.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인물은 지방대 출신으로 스펙도 변변치 않은 3개월짜리 계약직 24살 정주리다. 학자금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집세다 뭐다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컵라면이나 분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정주리의 연봉은 고작 1천2백만 원. 정주리는 이 땅의 술한 젊은이들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드라마 속 Y장이라는 대기업의 한 부서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만큼 많다. 책상을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하지만 5년차 정규직 연봉은 4천만 원으로 비정규직(계약직) 평균 임금보다 2천만 원 이상 많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단지 비정규직 차별과 설움만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경쟁 압력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자 때론 양심에 가책을 느끼면서도 악행을 해야 하는 정규직의 모습도 그린다.

절친한 동료가 관리자에게 찍혀 좌천



"내 의자 잃는 것보다 괴로운 건 동료를 잃는 것"

노동자들의 공감을 얻은 '힐링' 드라마 <직장의 신>의 한 장면.

될 위기에 놓이자 모르는 척 눈감으려는 팀장 정규직에게 우리의 주인공 미스 김은 따끔하고 울림있는 한마디를 날린다. "직장에서 의자를 잃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동료를 잃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갑자기 쌍용차와 현대차 노동자들이 생각나서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최근 이 드라마를 본 많은 네티즌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이란 미스 김 말대로 '우정'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생존'을 나누는 곳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런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도 함께 일하던 동료를 잃고 싶어 하

지 않는다. 아무리 회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키하고 밟고 올라서게 만들어도 말이다.

<직장의 신>은 끝났지만 진정 나에게 힘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이 신문 <레프트21> 속에 등장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어깨 겶고 고용주에 맞서 용감하게 전투를 벌이는 노동자들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소식 말이다.

이 안에는 허구가 아닌, 현실에서 저항하는 진정한 '직신'들의 진짜 '쌍얼' 라이브 리얼 액션 스토리가 담겨 있으니까.

육옥영화

## 경찰에겐 안됐지만 나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다

나는 2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한진중공업, 현대차, 쌍용차, 유성기업, 공무원노조 등 이명박이 끝내 해결하지 않고 남겨 둔 노동현안들을 이틀 뒤 출범할 박근혜 정권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집회였다. 또한, 이 집회는 박근혜 당선 직후 목숨을 끊거나 잃은 최강서, 이운남 등 여러 열사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집회이기도 했다.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은 자본들은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쥐어짖고 그에 비례해 노동 현안 해결을 바라는 범국민적 염원도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당선에 절망해 목숨을 끊은 열사들을 앞에 두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박근혜는 더는 노동

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동현안을 해결하려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의 하수인들이 보인 태도는 정반대였다. 이날 행진은 신고된 것이었는데도, 경찰은 중장비를 동원해 행진 대열을 막아섰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궤변을 떠들어댔고, 카메라 수십 대로 불법 채증을 해댔다.

나도 이날 얼굴이 찍혔는지, 두 달 후인 4월 24일 경찰한테서 출석요서가 날아왔다. 경찰은 청년인 나를 쉽게 겁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얼마 전에는 절차도 무시하고 집에까지 찾아왔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나와 내 가족 중 조금이라도

겁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무단으로 집에 찾아온 행태에 민주노총 변호사가 항의 전화를 하자 경찰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거짓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대통령의 얼굴은 바뀌었어도 정권의 본질은 그대로임을 경찰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위기는 이명박 때보다도 더 일찍 찾아왔고, 박근혜가 여전하 나 몰라라 하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절박한 처지에서 생기는 대중의 분노도 쌓이고 있다.

나는 1퍼센트의 대변자 정권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 대중과 함께 싸울 것이다. 정말 겁먹어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강병조

## 투쟁과 연대가 광주 정신 계승이다

풀 내음 그윽한 5월이다. 풀도 사람도 에너지가 약동하여, 질적 도약을 준비할 시기인 것 같다. 그러나 요즘은 그 에너지를 허튼 데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다. 광주민중항쟁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수구 우익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이곳저곳 별레처럼 출연해 광주민중항쟁 흠집내기 여념이 없다.

"승리하는 적 앞에선 죽은 자도 안전하지 못하리라"는 발터 벤야민의 말처럼, 광주민중항쟁이 요즘처럼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을까.

박근혜가 당선되더니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퇴출을 내세워 우익들이 시비를 걸었다. 그들은 퇴출 반대 여론의 못매와 저항에 당황해 결국 합창으로 대체했다.

광주민중항쟁이 북한군이 들어와 주도한 폭동이라는 황당한 왜곡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TV조선에 출연한 임천용의 증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 증언도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며 매우 부실하다. 그는 2006년 <한국논단> 인터뷰에서 특수부대 1대대 소속 4백50명이 내려와 그중 3분의 2가 희생됐다고 말했으나 2006년 12월 기자회견에서는 특수부대 1대대의 3분의 1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뉴스한국>과 한 인터뷰와 최근 종편 방송에서는 6백 명이 침투됐다고 말한다.

### 폭동

이런 일관성 없고 터무니없는 증언을 방송에 내보낸 종편도 언론사로서의 자질이 무척 의심스럽다. 결국 종편은 시청자들의 비난과 그들에게 저항하는 대중들의 매서운 반발로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우익 시청잡배의 꾸준한 왜곡에 맞서 저항한 결과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든 것이다.

최근 5월 18일에 맞춰 광주에 다녀왔다. 나에겐 그곳이 '박카스'였다. 신기하게도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는 게 아니

라 광주에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열사들의 묘역을 쪽 돌아봤는데 몸에 힘이 나고 마음을 다잡게 됐다. 2년째 오고 있지만 언제나 다른 느낌으로 광주는 나에게 말을 건다.

세간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광주민중항쟁을 계승하자고 외친다. 그러나 관념 속에서 그저 기억만 하는 것이 광주민중항쟁을 계승하는 건 아니다.

현대차 투쟁, 쌍용차 투쟁,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등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압받는 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광주를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묘역에 묻힌 열사들은 이 땅에서 착취받는 노동자였으며 여성이었고 도시 빈민이었다. 열사들의 염원은 이 땅에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이었을 터, 그렇기에 광주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강진영 원광대 학생

## 돈벌이에 혈안이 된 어린이집에 맞서 싸운 경험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명목으로 사교육이 버젓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는 여섯 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어와 한자교육을 하는데,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영어를, 뿌리를 알아야 하니까 한자를 배워야 한다는 명목이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을 때 어린이집 원장은 나라에서 공짜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게 해 줬으니, 특별활동비 정도는 충분히 지출할 수 있지 않느냐며 학부모들을 설득했다. 물론 절대 강요는 아니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입학식 때는 어린이집이 임의대로 특별활동 과목을 선정해, 학부모에게는 그중 하고 싶은 프로그램만 표시하게 하고, 적힌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했다.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나는 아이가 이른 시기부터 영어를 배우는 게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사교육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특별활동을 신청하지 않았다.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왜 내 아이만 참여시키지 않느냐며 함께할 것을 강요 비슷하게 '권유'했다. 그러나 아내와 나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아이는 교육 공간이 아닌 사무실 한편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교실 뒤편에서 같은 반 아이들이 영어와 한자는 배우는 것을 보고만 있게 됐다. 집에 와서 매일 '나도 시켜 달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고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소외되고, 방임되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화가 많이 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내와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하던 내게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돼 주던 아내도 내 아이가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서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부당하게 소외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문제제기를 하고,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은 반응이었다. 또 원장은 어린이집을 무시하느냐며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술을 먹고 밤에 전화를 해서 횡설수설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방임

아내와 나는 보육노조와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의 조언을 듣고, 관리·감독 기관인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

사교육 과목 선정 시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비민주적인 행태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공공연하게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 또 사교육을 신청하지 않은 아이를 방임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도 상황을 알리고 연대 요청을 해 두었다.

시청에서도 실태를 확인하고선 내가 제기한 문제에 토를 달 수는 없었다.

시청은 관내 어린이집 67곳의 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사교육 관련 이권에 개입하고 특별활동을 신청하지 않은 아이를 방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모들은 사과문을 통해 특별활동을 신청하지 않은 아이를 방임한 것에 대한 사과와 프로그램 계획을 공지 받았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도 새로 선출됐다.

설문조사 결과는 부모들이 특별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정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음을 보여 줬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시청의 약속을 믿어 보기로 하고 이번 일은 일단락됐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 아이의 불이익을 염려해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개선책은 없었을 것이다.

사회가 좀더 올바르게 나아가길 바란다면 나와 내 가족이 속해 있는 공간 주변의 문제부터 정확하게,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바꾸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이권이 있기에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싸워서 무언가를 바랍직하게 바꾼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김창훈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workerssolidarity.org](http://www.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부산 지회  
한반도 긴장과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간 갈등

연사 : 김영익 (<레프트21> 기자)  
일시 : 5월 3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부산 서면 토즈  
참가비 : 3,000원  
문의 : 010-2008-0588

서울 총북부지구  
경제 위기, 양극화, 민영화 ...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연사 :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 5월 3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4호  
(해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 2,000원 (청소년 1,000원)  
문의 : 010-9820-5698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박설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우선, 신설·적자 노선들에 사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데서 그렇다.

관심이 집중된 수서발 KTX에는 코레일의 지분을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고 경영권을 분리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 브리핑에서 “민간의 지분 참가 배제”를 말했다지만,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된 나머지 지분을 팔아넘기면 금세 민영화로 갈 수 있다. 게다가 공식 문서에는 그런 얘기조차 없다. 최종안에선 사기업을 끌어들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화물 부문부터 자회사로 전환하는 등 사업별 분리를 확대하고, 간선·지선·KTX 등에 각각 적합한 방식의 ‘경영 구조’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종합해 볼 때, 정부의 방안은 철도 사업 전반에 시장의 독소를 집어넣는 것이다. 즉, 철도를 분할해 이윤에 눈 먼 자본의 노름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핏수를 뿌리며 수서발 KTX에 대해 말을 살짝 바꿔 떠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 안은 이명박 정부 안보다 더 나아간 분할 민영화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에 따르겠다던 박근혜의 말은 역시 사기극이었다. 박근혜는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민영화를 통해 정부 부담을 줄이고 사기업의 돈벌이를 돕는 데 골몰하고 있다. 코레일이 주도하던 용산개발 사업 부도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지렛대 구실을 했을 것이다.

최근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에 반발한 코레일 사장에게서 사표까지 받아 내며, ‘코드 인사’로 관료들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물론 정부는 광범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공공성이 조화된 독일식 지주회



높은 반대 여론에 핏수를 쓰는 정부 거듭 눈치 보고 간 보는 정부에 맞서 단결해 싸우면 11년 전처럼 이길 수 있다. 5월 11일 서울역에서 진행된 KTX 민영화 저지 홍보전.

사 모델”을 강조한다. 같기같기 쪼개진 민영 기업과 자회사 들을 관리·통제하는 철도 운영 지주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분할 민영화를 위한 방편일 뿐이다.

독일에서도 지주회사 설립은 공공성과 거리가 멀었다. 독일에선 정부가 철도 지주회사 지분을 1백 퍼센트 가졌지만, 일반 공기업과는 달리 “민간기업들이 준수하는 기업법·규제 범위 내에서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전환

게다가 독일에서도 지주회사 전환은 각각의 자회사들을 분할 매각하려는 계획하에 추진됐다. 아직 이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지역 단거리 노선이나 화물 운송 부문에는 사기업들이 여럿 진출했고, 그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10만 명이 넘는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이어졌고, 노동자들은 지금도 낮은 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고통받는다. 이것이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지주회사 설립 방안은 독일과 다르게 주요 간선에 사기업의 참가를 보장하는 직접 민영화로 가고 있다. 따라서 대형 참사, 요금 인상 등

으로 악명 높은 영국식 분할 민영화에 더 가깝다.

설사 정부가 수서발 KTX 지분의 과반을 코레일·정부 지분으로 남겨 뒀 이른바 ‘관 주도의 민·관합동’으로 치장하더라도, 본질은 마찬가지다.

안 그래도 국토부는 기업 운영에서 “철도공사(코레일)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회계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심지어 “민간이 주도하는 방안”까지 열어 둔 듯하다.

게다가 KT의 경우, 완전히 민영화되기 전부터 주주 배당이 경영의 최우선 목표였다. 사기업 지분이 30퍼센트 정도였던 1997년엔 순이익이 전 주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당연히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시설 투자비는 대폭 삭감됐고 대량 해고도 벌어졌다.

결국 정부는 KT 지분을 야금야금 매각해 전부 팔아 치웠다. 수서발 KTX도 이처럼 완전히 민영화하는 길을 밟을 수 있다.

정부는 “코레일 독점의 비효율”을 제거하겠다고 하지만, 저들이 진정 없애려는 것은 바로 국가가 운영하는 안전하고 값싸고 질 높은 공공 철도다. 그동안 각종 시장화 조치로 상처난 철도 사업을 아예 돈벌이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공격하는 악랄한 시도다. 반드시 철도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

##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듯 한데요?

지금 나온 것만 보면, 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철도를 죄다 쪼개서 민영화하겠다고 하니깐요. 수서발 KTX뿐 아니라 다른 신설노선 4개도 다 민영화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차량회사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예요? 화물회사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예요? 차량회사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예요? 차량회사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예요? 차량회사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예요?

사기업들이 그냥 봉사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뽑아야 되니까, 안전이나 공공성은 관심 밖이겠죠.

## 정부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주회사는 주식회사를 잘 관리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철도를 다 쪼개 버리겠다는, 분할 민영화를 합리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재벌 그룹들을 봐요. 편법이나 눈속임하려고 지주회사를 악용하잖아요.

정부가 철도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를 철회하고 투자를 더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낯뜨 ‘철도 적자’ 타령만 하잖아요. 아니, 철도 적자가 당연한 거지. 정부가 국민들이 더 싸게 좋은 걸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철도 민영화가 미칠 파장은 어떻게요?

제가 볼 때는 파급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철도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산업이거든요. 철도 민영화는 전 국민적 사안인 거죠. 이 공공 철도라는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국토부 안을 못 막으면,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민영화

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국토부가 얼마 전에 ‘7천만 원짜리 정규직보다 5천만 원짜리 비정규직 쓰면 되는 건데’ 하는 식으로 말했잖아요?

지금도 (이명박 정부가 취한) 5천1백 15명 인력 감축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요.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얼마 전에도 서울역에서 한 분이 잠 자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분할 민영화하면 어떻게요? 관리 인력만 정규직 채용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채우려고 할 거란 말이지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철도노조는 작정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사실 우리는 1999년부터 이 싸움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지도부보다 조합원들이 더 잘 싸워 왔다고 생각해요.

이번 투쟁으로 ‘민영화 정책은 막았다’, ‘정치적으로는 이겼다’, 그런 얘기를 수 있게 해야죠. 같이 했던 분들에게 ‘당신들 대단했어’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2002년에 우리는 발전·가스 노조랑 같이 공투본을 만들어 싸웠어요. 그게 중요했죠. 발전 동지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이번에도 철도, 진주의료원, 가스, 물, 인천공항 등이 공동 투쟁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다들 민영화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정책에 반대하니까.

특히 KTX범대위를 비롯해 진보진영이 어떻게 판을 짜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최대한 다 묶어서 크게 전선을 치고 가야 한다는 거죠. 다 같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려고 해요.

인터뷰·정리 박설

## 진보 진영의 독립적 힘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가 가로막힌 데는 광범한 반대 여론뿐 아니라, 지배자들 내 갈등도 한몫했다.

코레일 사측도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고 선거 국면을 활용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관되게 민영화를 반대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도 코레일 사장 물갈이로 기강 잡기에 나섰다.

사실 코레일 관료들은 공공서비스 후퇴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점에서는 박근혜와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올 초에도

용산개발 부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희망퇴직” 운운했고, 최근엔 국토부에 ‘인력 감축’ 카드를 내밀었다고 한다.

따라서 코레일 사측을 우리 편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구조조정 운운하는 사측과도 날을 버리며 독립적으로 민영화에 맞서야 한다.

한편, 민주당이 민영화를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인 바 있고, 지금도 ‘경쟁을 통

한 효율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최근에도 일부가 ‘제2공사화’ 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던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민영화 반대에 일관된 이해관계가 있는 기층 노동자·민중 속에서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는 데 계속 매진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는 집권 초부터 위기를 거듭하며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럴 때 철도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이 강력한 파업과 정치투쟁으로 맞선다면, 재앙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

## ILO 협약 기준,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6월 1일(토) 오후 3시 여의도공원

주최: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